

건축과 도시공간

건축공간연구원이 만드는
건축도시정책 전문저널

Vol.53 - Spring 202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토지이용체계 개편에서 시작하다

정부는 농촌 토지이용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촌 토지이용체계 개편을 위한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농촌 토지이용체계 현황과 개편 방향, 농촌특화지구 운용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a u r i)



건축과 도시공간

Vol.53 - Spring 2024

(a u r i)

건축과 도시공간

Vol.53
Spring 2024

발행 2024년 3월 31일	〈건축과 도시공간〉은 건축·도시 분야 정책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정책전문지입니다.
발행인 이영범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건축공간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책임 고효진	
정책이슈 기획 여혜진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편집 이미영, 김민자	본 연구원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밧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행처 건축공간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건축과 도시공간〉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정책이슈 및 건축도시 동향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투고가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또한 본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및 기획에 대한 의견이나 필진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메일을 통해 제안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www.auri.re.kr information@auri.re.kr	
디자인 (주)디자인인트로 02.2285.0789 www.gointro.com	
ISSN 2288-2332	

CONTENTS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토지이용체계 개편에서 시작하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역할	김보람	006
농촌정책의 역사와 현재 - 농촌공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김정연	010
농촌공간계획으로 준비하는 농촌의 미래	성주인	018
농촌 토지이용체계 개편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운용과제	여혜진	026

통계자료실		
시민들은 따뜻하고 쾌적한 집에 거주하고 있을까?	문보람	036

건축도시동향		
해외동향	미국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계 가이드라인과 시사점	권오규 042
	폴란드의 공유유산 정책: 역사를 공유하는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손은신·길지혜 046
국내동향	우리만의 방식으로 지역의 매력과 변화를 만드는 로컬브랜딩	박정환 051
해외단신	UN 해비타트,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위한 가이드 발간 외	056
국내단신	문화체육관광부,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외	060

장소탐방		
문화재생,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다 - 조치원1927아트센터	홍경식	066
도심 소공인 제조업 공간의 혁신 - 성수 사일로: 서울도시제조허브	강예린·이치훈	082

auri 소식	
·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100
· 상징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 국제세미나 개최	108
· 2024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 개최	109
· 2024 제3차 AURI 아카데미 ‘한일국제세미나’ 개최	109
· 2023 AURI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110
· 건축공간연구원-(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MOU 체결	111

표지

농촌공간은 우리 국민의 삶터이자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터,
자연과 만날 수 있는 쉼터로서
크고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공간만의 농촌다움을 되찾기 위해
지역에 맞는 방법과 장기적인 관점,
방향성을 고민합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토지이용체계 개편에서 시작하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역할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다움의 회복과 농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 체계, 농촌특화지구, 주민협정 및 농촌협약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농촌정책의 역사와 현재 - 농촌공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우리나라의 농촌공간정책은 농업 부문의 보조 역할의 위상을 지니다가 시대 흐름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기 구분에 따라 우리나라 농촌공간정책의 전개 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농촌공간계획으로 준비하는 농촌의 미래 | 장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는 기본방침을 통해 국가적으로 진행할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해야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추진할 특성화된 과제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농촌 토지이용체계 개편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운용과제 | 이제 농촌에서도 용도 입지를 다루지 않고는 토지이용의 외부불경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법적 토지이용 조정 및 관리 목적의 행정행위 실효를 갖출 수 없다는 것이 본 제도 설계의 중요한 문제인식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역할
006

농촌정책의 역사와 현재
- 농촌공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010

농촌공간계획으로
준비하는
농촌의 미래
018

농촌 토지이용체계
개편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운용과제
026

1

그간의 농촌정책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시설 공급이 중심이 되어, 농촌경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루고자 해 왔다. 그러나 농촌에서 대지, 전·답·과수, 목장용지, 공장용지, 잡종지 등 서로 상이한 토지이용이 연접하면서 외부불경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데 비해, 체계적·계획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농촌 토지이용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촌 토지이용체계 개편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를 도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법률의 시행에 맞춰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농촌 토지이용체계 개편 방향, 농촌특화지구 운용 과제를 모색해 본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와 역할

김보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

농촌의 난개발과 농촌다움 훼손

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은 농촌소멸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국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과반이 거주하고 있다. 2000년에 21.7%였던 농가 고령화율은 2022년 49.8%에 달하며, 2020년 기준으로 1,404개 읍·면 중 908개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농촌의 성장 잠재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도시는 인구 집중으로 인한 주택 및 환경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용도지역이 세분화되고 용도지구 등을 통해 조밀하게 관리된다. 반면에 농촌지역은 농지와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가 허용되다 보니, 주택·상업시설·공장·농업시설 등이 한 공간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체계적인 공간관리가 어렵다 보니 악취와 오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의 민간·공공 투자를 어렵게 하여 농촌의 성장 잠재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농촌 거주 또는 농촌에서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생의 공간으로서 농촌이 갖는 가치와 미래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였고, 농촌에서의 창업활동도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50만 명가량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무엇을 담고 있나

이 귀농·귀촌하였고, 그중 절반은 40세 미만이다. 5년 내에 농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고자 준비하는 도시민도 31%에 달한다. 농촌의 농식품산업 분야 연간 창업 건수도 2010년에는 990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3,19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사회적 경제조직도 7,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난개발이 전국에서 이뤄지고 주변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이 들어서면서 농촌다운 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촌 자원을 보전하고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농촌공간을 만드는 데 기존의 공간 계획체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하에,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도록 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제정(2023.3.28.)되었고, 2024년 3월 29일 시행되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다움의 회복과 농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 체계’, ‘농촌특화지구’, ‘주민협정 및 농촌협약’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가·지역 단위의 중장기 계획 수립은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함께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이 지닌 기능을 회복 또는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는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에서 특색 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 계획이다. 국가 차원에서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기본방침,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 사업계획인 5년 단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또한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토지이용체계인 농촌특화지구제도를 도입하였다. 주거, 산업, 축산, 재생에너지, 경관 등 농촌의 다양한 토지이용 목적에 따라 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에는 유사 시설이 계획적으로 입지하도록 유도한다. 농촌특화지구를

중심으로 주민협정을 통한 상향식 토지이용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재정 지원 및 제도적 특례도 연계할 계획이다.

주민협정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개발·관리에 필요한 자치규약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협정으로 농촌특화지구의 안정적인 현장 도입과 안착을 돕는다. 해당 농촌공간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주민협정을 통해 농촌공간계획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으로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온 농촌협약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군수가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제까지 총 53개 시·군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의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토대로서 기능하며,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농촌의 기능을 회복·증진하는 사업의 통합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군에 지원 가능한 대상 사업 목록을 22개 제시(2024년 기준)하였고, 시·군은 그중 지역의 비전과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 등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촌협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에 정책 역량이 집중됨에 따라 농촌지역 대상의 투자와 정책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농촌공간계획의 수립,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사업 추진 및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중앙 및 지자체에 둘 수 있으며, 농촌공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농촌공간 관련 계획 및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촌공간중앙정책심의회를, 시·도 및 시·군에는 농촌공간광역·기초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

국민 모두의 행복 실현공간, 농촌

농촌공간계획제도가 실행됨에 따라 농촌은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 대상으로는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중심으로 주거 및 정주 인프라, 경제 기반, 사회서비스 등이 확충될 계획이다. 농촌에서의 삶을 매력적으로 여겨 반농반X,^{*} 5도 2촌 등 새로운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농촌 관계인구 등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 창업 등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농촌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조된다.

그리고 농촌공간이 농촌다운 농촌, 국민 모두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촌주민·도시민·전문가와 지역 경영체 및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농촌공간 계획제도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참고문헌

- 1 송미령, 성주인, 손학기, 한이철, 민경찬, 서형주. (2021).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실증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심재현, 정문수, 한이철, 민경찬, 정학성. (2021). 인구감소 시대,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 이상호, 김필. (2022).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시자료. 한국고용정보원.
- 4 통계청. (2020). 귀농어·귀촌인 통계.

* 반(半)은 자급적인 농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병행하는 삶

농촌정책의 역사와 현재

- 농촌공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우리나라의 농촌공간정책사

우리나라의 농촌공간정책은 농업 부문의 보조 역할의 위상을 지나다가 시대 흐름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왔다. 연대별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시대별 농촌공간정책 추진 내용 및 특성

기간	주요 정책	정책사업 및 프로그램 특성	공간 범위	개발전략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지역사회개발 (CD프로그램)	- 농업지도 - 생활환경 개선	마을	하향식 개발
1970년대	새마을운동	- 농업생산 확대 - 생산기반 개선 - 생활환경 개선 - 자원개발 및 소득증대 활동	마을, 마을권	하향식 개발, 그러나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
1980년대	종합적 농촌지역개발	- 생활환경 개선 - 생산기반 개선 - 농촌산업화 추진 - 농외소득 기반 다양화	시·군	하향식 및 외생적 개발, 농촌생활권 종합개발
1990년대	정주생활권 개발	- 생활환경 개선 - 문화·복지시설 확충 - 개별 단위사업 증대	읍·면	하향식 개발, 단위사업 중심 개발
2000년대	복합생활공간 개발 및 삶의 질 향상	- 생활환경 정비 및 삶의 질 향상 - 지역에 특화된 농촌의 자원 개발과 산업화 - 도·농 교류 증대 - 통합적 농촌개발을 위한 제도 수립	마을(권역) 및 읍·면	하향식, 상향식, 내생적 개발의 혼합

김정연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기간	주요 정책	정책사업 및 프로그램 특성	공간 범위	개발전략
2010년대	통합적 농촌개발	-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 6차 산업화 촉진 - 생활환경 정비 및 삶의 질 향상 - 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 추진	마을(권역), 읍·면 및 지역 간 연계	자율적 개발, 집중과 네트워크 전략
2020년대	생활권계획 농촌협약 농촌공간정비	365생활권 실현(생활서비스의 원활한 충족) 마을 단위사업 지방이양과 농촌협약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와 농촌다움 증진	농촌특화(정비)지구, 중층적 농촌생활권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기능적 재생

출처: 송미령 외(2013, p.12)의 내용을 보완함.

이를 농촌공간정책의 관점에서 재정리하면 마을 단위 공간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개발과 새마을운동기(1960~1970년대), 농촌공간정책의 기본 틀을 형성하여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농촌정주생활권 전략과 농촌종합개발 방식의 도입·실험기(1980~1990년대),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제고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개발 정책영역의 확대 및 통합적 농촌개발기(2000~2010년대), 농촌협약 추진 및 농촌공간계획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새로운 전환 모색기(2020~)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기 구분에 따라 우리나라 농촌공간정책의 전개 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지역사회개발과 새마을운동 (1960~1970년대)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정책은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 프로그램이 추진된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1950~1960년대 농촌 개발정책은 농촌 주민들이 절대빈곤을 극복하고 농업생산성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정책 목표였다. 이런 목표하에 농업지도와 주거환경 개선에 주로 초점을 두어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은 196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처음에는 개별 마을 중심으로 추진하다가 나중에는 5~10개 마을을 개발지구로 함께 묶어 지역사회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이 추진되면서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였다. 농촌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마을 길 넓히기, 지붕 개량, 소하천 정비, 마을 정비 등 주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농촌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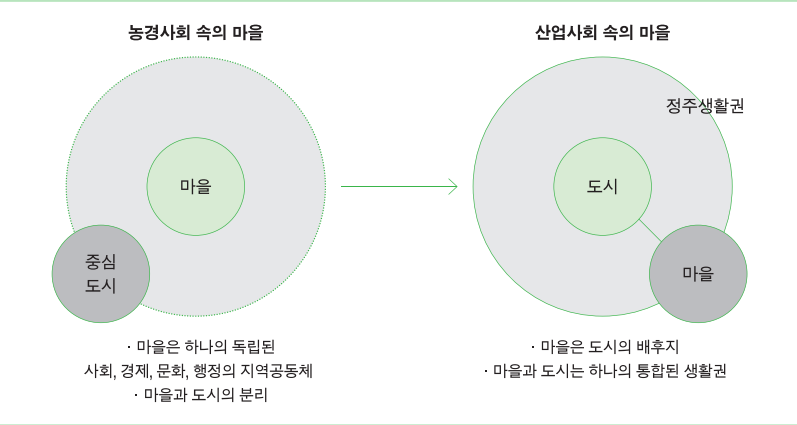
이러한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농촌 지역사회의 리더들이 양성되는 등의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 시작되어 그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로 확대 추진되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이 산업사회에 편입되어감에 따라 개별 마을 중심의 새마을사업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 1975년부터는 2~5개의 마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동권 새마을사업을 도입하고, 1977년부터는 단위협동조합을 시발점으로 새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농촌정주생활권전략과
농촌종합개발 방식의
도입과 전개
(1980~1990년대)

1960년대부터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도시화로 농촌지역에서도 자급자족적인 농촌사회가 산업사회의 시장경제 체제로 편입되면서 농업의 상업화와 전문화가 촉진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문화·시장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에 대한 농촌주민의 수요가 증대되어, 이전에는 마을에서 대부분 충족되었던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읍면소재지와 주변 도시에서 이뤄지게 되었다.

산업화에 의한 농촌주민의 생활권 변화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지역종합개발연구단(1987, p.8)

이 같은 농촌주민의 생활공간 확대에 따라 1981년 당시 내무부는 정주생활권개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 참여하였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84년부터 농촌정주생활권전략과 농촌종합개발 방식을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정주생활권은 ‘인간정주생활의 기본단위가 되는 권역으로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그리고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안정된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기본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일상 생활권’으로 상정한다(최양부, 정철모, 1984). 농어촌정주생활권 내부의 정주체계는 인구 2만~10만 명의 시·군청소재지가 정주생활권 전체를 서비스하고, 인구 3,000명 이상의 읍·면소재지는 주변의 2~3개 면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다(최양부, 이정환, 1987, pp.179~183).

정주생활권 개발을 위해서 중심도시와 배후 농어촌 간 상호 보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도농통합개발(Rural Urban Integrated Approach), 농촌경제·농촌사회·생활환경·지역문화관광 등을 포괄하는 종합개발, 주민의 개발수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상향적 개발 등의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농촌지역종합개발 방식의 정책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1985년부터 3개 실험지역(충남 공주군, 전남 강진군, 경북 청송군)에 대한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 계획에 의해 제안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투자 사업비 중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재원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1986년 3월에는 농어촌종합대책에서 농어촌지역종합개발 방식 및 지역별 예산편성 방식의 정책화를 천명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의 행정 추진체계가 변화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3874호)을 제정하여 보조금 신청주의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마을 단위 개발로부터 시·군 단위의 농어촌지역개발정책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 낸 이 정책 모형은 실험 단계에서 종료되고 말았으나, 그 이후 시대별로 농어촌지역개발정책이 형성, 변화해 온 과정에서 지향가치, 접근방식, 공간 단위, 대상영역, 추진체계 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있다.

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시·군 연계생활권 형성 및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역·계층을 아울러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정책의 기초를 채택하였다. 이를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주민의 일상 생활권을 대상으로 주민체감형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다. 여기서 지역행복생활권은 2~4개의 연결한 지자체들이 합의하여 구성하는 것으로서 농어촌생활권(21개), 도농연계생활권(14개), 중추도시권(20개), 시범생활권(8개)으로 구성되었다. 농어촌생활권은 도시적 특성보다 농촌성이 완전한 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지역으로 구성되며, 지역 간 상호 보완적 연계와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중시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행복생활권은 ‘일상생활권, 삶의 질 충족’이라는 면에서는 이전의 정주생활권이나 기초생활권과 개념적으로 동일하나, 생활권의 범위가 훨씬 넓다는 점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상생발전을 강조한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문재인 정부는 농촌생활권 발전전략을 보다 구체화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의 하나로 365생활권 구축(정주여건개선) 전략을 도입하고, 이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읍·면·배후마을을 연계하여 복합 생활SOC 거점을 확충(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등)하고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커뮤니티 버스 운영, 찾아가는 문화·교육·복지 등의 생활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을 도모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농촌개발 관련 회계 제도도 변화되어 왔다. 2005년에는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하나의 회계로 통합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도입하고, 2010년에는 기존의 210개 지역개발사업을 24개 사업군인 포괄보조 사업으로 묶어 통합패합한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가 예산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계획·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농촌개발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중 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읍·면 지역을 포함한 농촌 시·군 중에서 특수상황지역을 제외한 12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도농격차 확대로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의한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농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농업구조 개편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촌인구 유지를 위한 농촌 정주생활환경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의 농어촌지역개발정책은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로서 그 표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에 제안된 농어촌지역종합개발 방식을 수용코자 하였으나, 농산물시장에 대한 대외 개방 압력이 심화되면서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이 중심이 되고 공간정책적 측면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읍·면 단위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위주로 축소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과 「농어촌정비법」(1994)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농촌공간계획 차원에서는 2000~2010년대에도 각 정부의 농촌개발정책에서 농촌정주생활권 접근방식을 수용하면서 농촌개발 시책을 추진하였다.

참여정부는 배후 농어촌에 대한 생활서비스 공급 중심지 역할을 하는 소도읍(읍급도시)을 거점기능을 갖춘 농촌지역의 산업·문화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하고, 배후마을은 소도읍과 연계하여 권역 단위로 묶어 2004년부터 농어촌마을종합개발을 추진하였다. 참여정부의 농어촌지역개발은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도농통합적인 농어촌정주생활권 전략을 전제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MB정부는 광역경제권정책의 보완적 공간정책 수단으로서 기초생활권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초생활권은 “중심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들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심지와 배후지역으로 이루어진 정주생활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소도읍 또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정의하여 1980년대의 정주생활권론을 계승하였다. 나아가서 MB정부의 기초생활권정책은 주민 생활권의 광역화 현상의 수용 및 과소지역

농촌생활권 발전 전략의 계승과 일반농산어촌농촌개발 (2000~2010년대)

농촌협약 추진 및 농촌공간계획 제도적 기반 구축 (2020~)

내역사업의 구성은 거의 매년 개편되어 왔으며, 2020년부터는 지방분권 추진의 일환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테마형 서비스 거점 조성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마을만들기사업과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은 지방에 이관하였다.

자치분권종합계획(2018)에 따라 2020년부터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정책사업의 관리 권한을 연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게 되었다. 농촌개발 분야에서도 마을만들기, 현장포럼,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농촌다음 복원 등의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게 됨에 따라 읍·면 소재지 등의 거점개발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배후마을 정주여건 개선은 지자체가 각각 분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공간에 대한 종합적 계획의 부재, 지역개발사업 간 연계 부족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대응책으로 농촌공간계획체계를 재정립하고, 농촌협약제도를 도입하여 통합적인 농촌개발을 추진코자 하였다. 여기서 농촌공간계획체계는 시·군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20년) 발전계획인 농촌공간전략계획, 시·군 전체 도는 일부 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5년) 실행계획인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그리고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 특정 지구를 대상으로 유해성을 제거·완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농촌정비지구사업계획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농촌공간계획체계는 협력적·통합적인 농촌개발을 지원하는 측면과 함께 후술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제정·시행과 원활하게 연계시키고자 하는 측면도 지니고 있었다.

농촌계획제도 개선 관련 다양한 연구와 정책실험을 바탕으로 2023년 3월 28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제정함으로써 농촌공간 계획·관리의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색을 고

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중앙·광역·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공간정책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규정, 계획, 협약에 의한 공간 관리, 토지이용 관리, 사업 실행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특화지구 운용으로 농촌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공간 관리와 토지이용 관리를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이상과 같이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에 필요한 기초적인 추진 기반은 마련되었다. 새로운 농촌개발을 위한 기회의 창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하위법령 등 제도적 기반의 충실화, 세부 정책수단의 도입 및 기법의 개발, 다양한 성과 창출과 확산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R&D 기반의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와 협의·합의 과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1 김정연. (2023). 한국농촌정책의 역사와 현재: 공간정책을 중심으로.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발표자료.
- 2 농림축산식품부. (2020). 농업·농촌 10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627-661.
- 3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심재현, 권인혜. (2013). 새정부 농촌지역개발정책 및 지역행복생활권 실행 계획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4 최양부, 이정환. (1987). 농촌사회의 농촌개발전략-새로운 농촌지역 종합개발방식의 선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5 최양부, 정철모. (1984). 농어촌지역종합개발에 관한 연구 1 - 농촌지역의 정주체계와 중심지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지역종합개발연구단. (1987). 농촌지역 종합개발 추진 개선방안(안).

농촌공간계획으로 준비하는 농촌의 미래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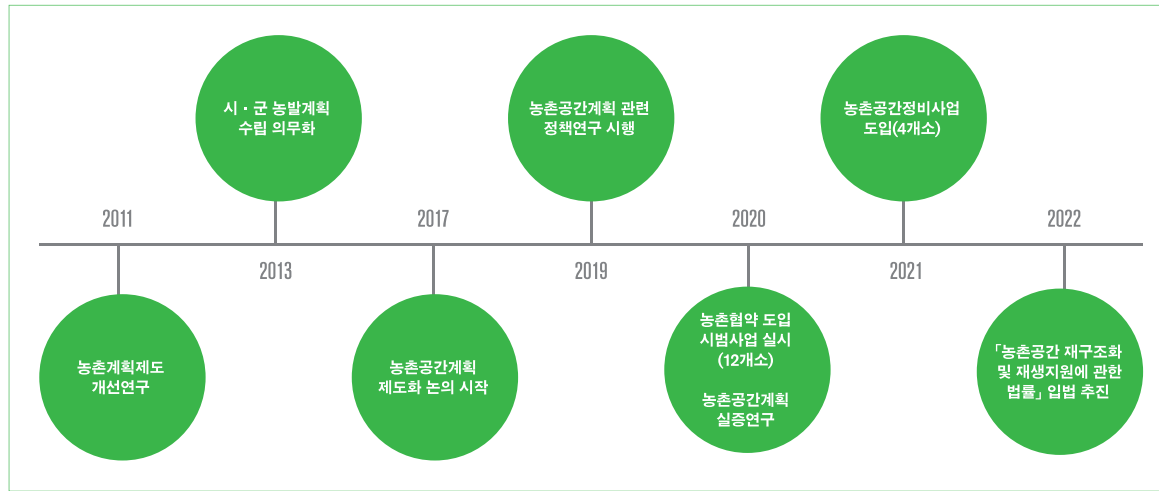
들어가며: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계획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농촌정책 분야 연구자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근대화·산업화 이래 농촌을 둘러싸고 농가소득 감소와 인구 유출 같은 문제들이 가장 주요하게 제기되었지만, 농촌에서 난개발이 확산되고 심화되는 것도 꾸준히 지적된 문제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농촌의 모습만은 선진국과 한참 거리가 먼 현실이 아프게 거론되어 왔다.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준농림지역 난개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2002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제정되었다.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전체 국토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지구 지정을 통해 토지이용관리가 이루어지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도시 중심의 도시계획으로는 농촌공간을 관리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국토계획법」 시행 이후에도 난개발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었다(송미령 외, 2003; 성주인 외, 2011).

이런 배경에서 2010년대 들어 농촌정책 분야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농촌계획제도 정비를 위한 검토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여러 논의를 거친 끝에 2013년에는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일명 ‘농발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이 계획이 농업·농촌 분야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도 일부 있기는 하였다. 하

농촌공간계획 관련 주요 연구 및 정책 추진 경과



출처: 성주인(2023a)

지만 품목 중심의 농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 계획인 데다 5년 단위 사업들의 묶음이라 할 농발계획에 농촌공간 관리의 과제를 담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움직임은 지난 정부부터 가시화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이 확대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사업들이 지자체로 대거 이양되었다. 중앙이 주관하던 보조금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전과는 다른 정책 추진 방식을 채택할 상황을 맞게 되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계획 도입이 분권시대의 농촌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마침 난개발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논의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익산시 장점마을 사례이다. 유해물질 배출 공장이 마을에 인접하여 상당수 주민이 암에 걸린 사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농촌의 난개발이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송미령 외, 2021). 기존 토지이용 제도의 공백 속에서 벌어진 일인 까닭에 이를 계기로 농촌 마을의 난개발 상황 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

*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지방분권 확대에 따라 농촌 계획제도 정비와 농촌협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난 바 있다(송미령 외, 2018).

농촌이 처한 여건과 시사점

이 힘을 받아 진행될 수 있었다. 2021년부터 주거환경 저해시설의 철거나 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2023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제정되어 2024년 3월 29일 시행되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기본방침(10년), 지자체의 기본계획(10년) 및 시행계획(5년) 수립을 위해서는 최근의 농촌 여건 변화, 장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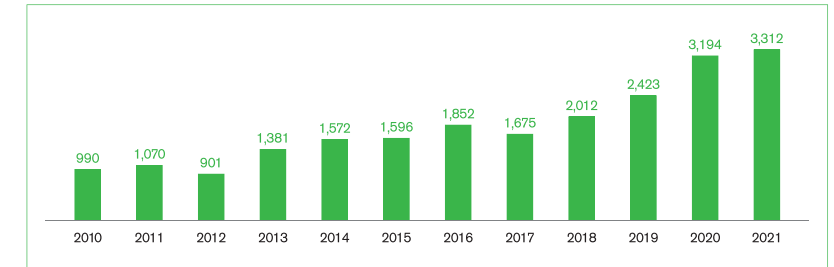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과정에서 난개발 이슈가 많이 거론되었지만, 최근 농촌지역 대부분이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은 농촌소멸 문제이다. 2010년대에 우리나라 농촌 인구는 귀농·귀촌 유입에 힘입어 과거의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인구가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앞으로 자연감소가 급격히 진행될 것인바, 현재의 감소 국면이 반전을 맞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마을 공동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다수 마을에서 공폐가가 늘고 인프라도 퇴락할 것이다. 읍·면 소재지 기능 저하도 피할 수 없다. 배후지역에 대한 서비스 거점 역할을 하기 힘든 과소화 읍·면이 전국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예컨대 현재 인구 2,000명에 못 미치는 읍·면이 전국 읍·면 중 약 25%인데, 머지않은 장래에 이 비율은 30%를 넘을 것이다(성주인, 2023b). 장래 농촌 지역사회의 모습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배후마을들의 경우 고령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며 마을을 대표해 활동을 수행해 온 이장들 역시 고령화되고 있다.* 소멸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공동체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마을들이 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공간정책 측면에서 큰 도전이다.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의 역할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제약이 되기 때문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국 102개 농산어촌 패럴마을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원격지역 마을들의 경우 70%를 넘는 주민들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패럴마을 이장들의 연령도 전국적으로 68%가량이 60~70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다(송미령 외, 2023 재집계).

연도별 읍·면 지역 농식품 분야 창업 건수 변화 추이

단위: 개



출처: 통계청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2014~2021) 원자료 집계.

이 같은 위기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사회 트렌드 변화 속에 기회 요인을 잘 포착해서 활용하는 일이 필요하다. 첫째, 2013년 이후 연평균 40만 명대 후반 규모의 귀농·귀촌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과거 이촌향도를 주도하였던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농촌 순유입으로 이동 흐름이 바뀌었다.*

둘째, 농촌에서의 창업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농촌(읍·면)에 소재한 농식품산업(산업중분류 기준 농업, 음식료품 제조업) 분야의 경우, 연도별 사업체 창업 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에서 2021년 사이 연평균 11.6% 증가하여 전국 증가율(연평균 7.5%)을 상회하고 있다. 농촌이 장래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가 될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농촌은 장래 국민들의 활동무대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5년 내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려고 준비 중인 비율은 31.0%이며, 이 가운데 농촌에서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려고 준비 중인 비율이 4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를 옮기지 않더라도 농촌에서 2지역 거주, 취미농업, 여가, 예술활동 등 자신이 구상한 활동을 수행하려는 의향층이 폭넓게 존재함을 말해 준다.

* 2022년의 경우 모든 비수도권 군 지역에서 45~64세 연령층의 순유입이 일어났다(인구이동통계 집계).

** 송미령 외(2019)의 설문조사 결과를 재집계하였다.

이처럼 농촌의 미래에는 위협과 기회가 모두 자리 잡고 있다. 전반적인 인구 공동화 상황 속에서도 장래 농촌이 국민들의 정주공간으로서 역할을 이어가려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춘 마을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농촌 중심지 기능이 작동 가능한 임계인구 규모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국 어느 곳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든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주인구가 감소하지만 2지역 거주 및 관계 인구가 확대되는 트렌드를 농촌 활성화의 기회로 살려야 할 것이다. 창업 활동 증가 추세를 활용하여 농촌형 경제활동 육성도 장래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관건이다.

이런 여러 일들이 장차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대응할 숙제이다. 장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는 기본방침을 통해 국가적으로 진행할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해야 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추진할 특성화된 과제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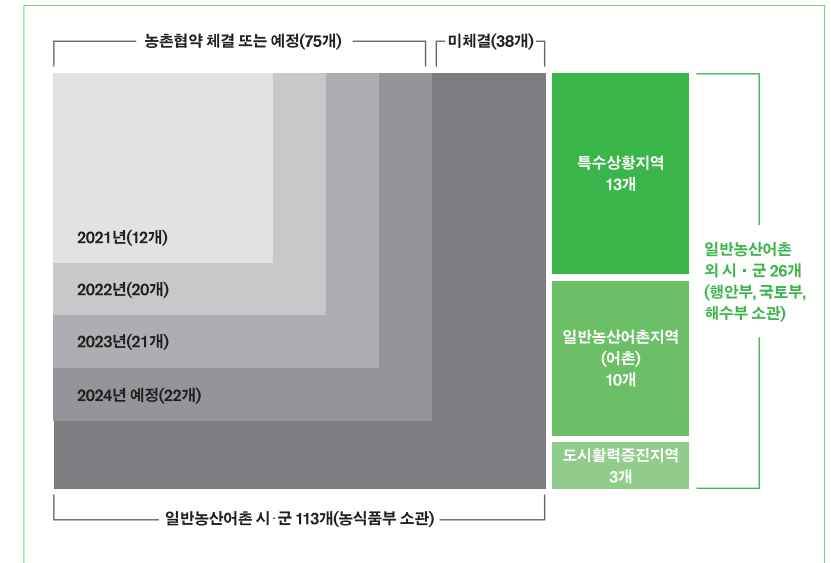
농촌공간계획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원활하게 자리 잡도록 지금부터 준비할 일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지자체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일이 당면한 과제이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농촌(읍·면)이 포함된 전국 139개 기초지자체로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동안 농림수산물부에서 관할한 일반농산어촌지역 113개 시·군 외에 광역시 내 군, 접경지역(특수상황 지역) 시·군까지 포함해서 모든 시·군들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일반농산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시·군까지 고려하여 러번(Rurban)지역, 어촌지역, 접경지역 등 다양한 농촌 유형에 적합한 농촌공간계획 방향을 정립하는 일이 요청된다.*

둘째, 정부는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계획을 위한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군의 중장기 농촌

* 일반농산어촌 시·군들 중 78개는 2020년부터 추진한 농촌협약에 참여하면서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등 유사 계획을 수립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시·군 현황



출처: 성주인(2023)

발전 방향을 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경우 과도하게 전문적이거나 불필요한 내용까지 담으면서 정작 실행 수단은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제시된 과제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촌협약으로 지원되는 사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20년부터 농림수산물부에서 농촌협약을 추진하면서 연계 지원되는 대상 사업 종류를 확대해 왔지만 대다수 시·군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한정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이외에도 농림수산물부에서 지원하는 분야별 사업들이 향후에는 농촌공간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고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교육, 문화, 복지, 창업 지원 등 관련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도 본 계획을 통해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시 접경지역을 비롯하여 일반농산어촌에 포함되지 않는 지자체까지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는 작업을 농림수산물부 차원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는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도 필요하다. 농촌다운 자원 및 정주환경을 보전하는 마을보호지구 등 농촌특화지구 지정·운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인센티브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공간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뒷받침하는 계획 지원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법률에 의거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고 이 분야의 역량 있는 인적 자원도 부족하다. 지자체 행정 역시 제도 운영을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광역 및 기초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위상, 역할, 활동 추진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특히 다수 농촌 지자체가 인구 공동화로 인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시·군 단위 농촌공간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는 제약이 클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시·군에서 운영해 온 여러 분야의 중간지원조직을 농촌공간계획제도 운영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의치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광역 단위에 설립된 각종 기구에서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등의 대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도 운영을 위해 중앙 단위에서 지원할 사항들도 있다. 시·군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성과 모니터링 등을 통합적으로 뒷받침하는 공간정보지원체계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시계획 분야처럼 농촌공간계획 관련 업무가 하나의 독립적인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하고 계획 기법 및 이론을 개발하는 작업도 중앙정부에서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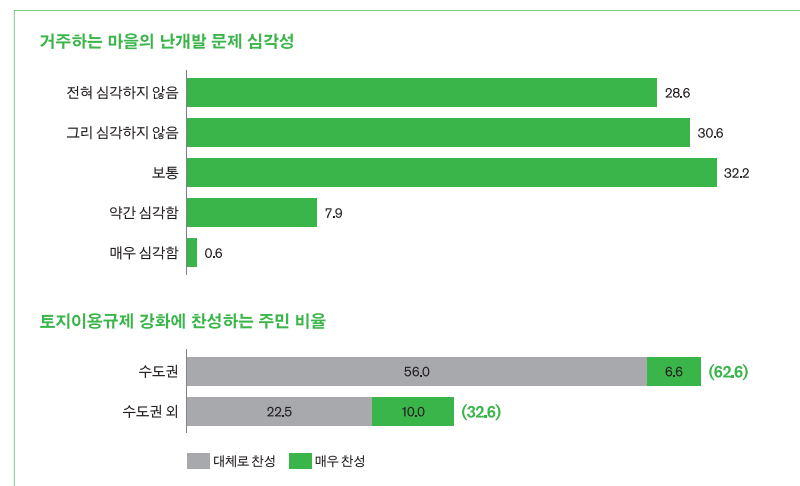
- 1 성주인. (2011).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 성주인. (2023a).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과제. 2023년 충북농촌개발세미나 발표자료.
- 3 성주인. (2023b). 농촌 소멸, 문제 진단 그리고 대응 방향.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 제2차 회의 발표자료.
- 4 송미령, 박석두, 김수석, 성주인. (2003). 농촌지역 토지의 계획적 보전과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5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심재현, 서형주. (201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성과 분석 및 발전모델 개발(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6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심재현, 정도채, 서형주. (2019). 행복한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구상: 농촌 유토피아 관련 사례와 정책 실천(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7 송미령, 성주인, 손학기, 한이철, 민경찬, 서형주. (2021).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실증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8 송미령 외. (2023).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 사업(4/10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9 통계청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2014~2021).

셋째,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농촌 현장 주체들 사이에 농촌공간 계획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도가 아직 높지 않은 상황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의거하여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일선에서 인식한다면 앞으로 농촌특화지구 등 법에 담긴 주요한 수단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촌 주민 설문조사 결과(송미령 외, 2023),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한 주민 비율은 10% 미만이고, 과반수 주민이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마을 주거환경 보전 및 위해시설 입지 방지 등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도 수도권 지역은 찬성하는 주민 비율이 62.6%에 이르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32.6%로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지나치게 규제에 강조점을 두고 농촌마을보호지구 등을 운영하면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주민과 지역사회 주도의 상향식 농촌공간 관리를 제도로 뒷받침하는 추세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우리 농촌에서도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상향식 계획 과정이 확산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활동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

농촌 주민들의 거주 마을 난개발 및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인식

단위: %



출처: 송미령(2023) 재구성.

농촌 토지이용체계 개편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운용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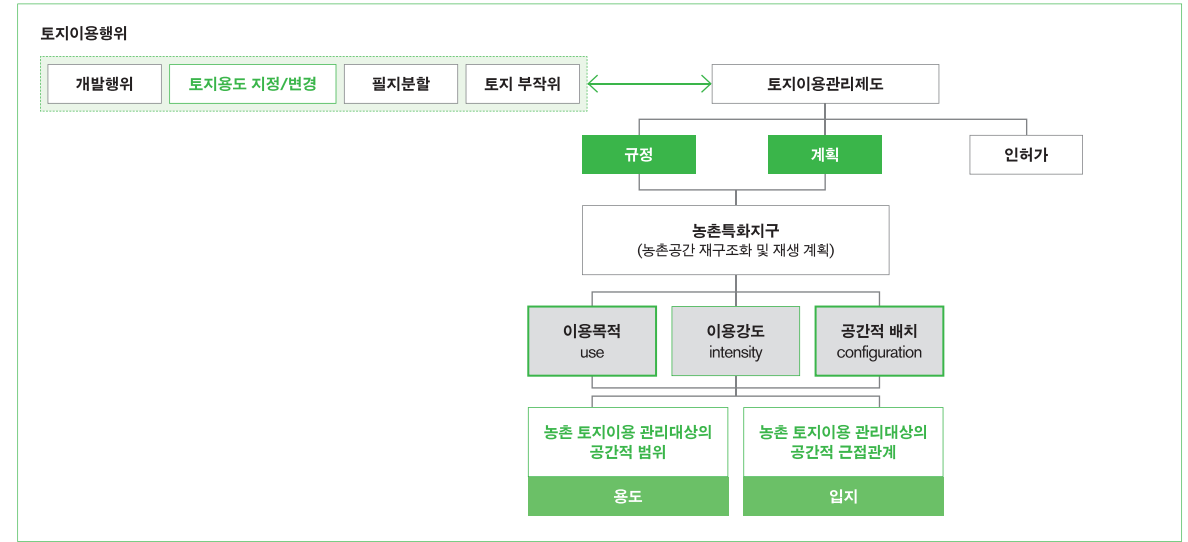
여혜진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농촌특화지구 운용의 논의구조

정부는 국정과제 70에 따라 2022년부터 농촌 토지이용체계 개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어 왔다. 이의 성과로 올해 3월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법 제1조)에 대응하기 위해 토지이용관리수단으로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한다. 여기서 말하는 난개발은 아직 법적·학술적 정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계획에 기반하지 않은 개발, 인프라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토지이용의 공간적 구성 오류를 야기하는 개발’을 말한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1999). 이 가운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주목하는 농촌의 난개발은 용도지역제에 따라 주택 바로 옆에 공장, 축사, 발전시설, 쓰레기처리시설, 위험물처리시설 등의 입지가 허용되고 주민이 토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고착되어 온 생활·생산·자연환경 관련 토지이용의 혼합적 양상에서 비롯된다.

이는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도시의 주거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토지이용체계이다. 그간 농촌 토지이용관리는 토지자원의 관점, 도시는 입지관리 관점으로 이원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농촌에서도 용도 입지를 다루지 않고는 토지이용의 외부불경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법적 토지이용 조정 및 관리 목적의 행정행위 실효를 갖출 수 없다

토지이용관리제도에서 농촌특화지구 운용의 논의구조



출처: 여혜진 외(2023a, p.17) 참고 재작성.

는 것이 본 제도 설계의 중요한 문제인식이다. 전통적인 토지이용계획이론에서는 이를 토지이용의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공간적 구성 오류로 정의하며, 사적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본다.

이러한 여건에서 농촌특화지구 운용의 논의구조는 국토·토지이용관리체계에서 규정이 갖는 세 가지 기능 중 농촌 토지의 이용목적과 공간적 배치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입지관리 기능 도입에 중점을 두어 지역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통해 자율적으로 토지이용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농촌특화지구는 우리나라 농촌에 독특한 토지이용의 혼합적 특성은 유지하되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특정 토지이용의 공간적 구성을 재조정하는 토지이용체계 개편에 주안점을 둔다. 이를 토지이용관리제도에서는 ‘입지관리’라고 한다.

이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는 용도지역에 의한 농촌 토지이용관리의 한계를 보완·개선하고 농촌공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관련 용도에 따라 구획하고 유사기능을 집적화하여, 거주지역을 보호하고 산업 관련 토지이용을 집약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24).

농촌특화지구 운용체계: 규정 및 계획

여기서는 농촌특화지구 운용체계를 간략히 설명하고 입지관리를 위한 운용과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농촌특화지구 운용체계는 규정을 계획에 맞춰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이다(「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7조, 제10조, 제12조). 법률에서는 지정범위, 최소규모, 입지 적정성 검토기준 등을 정하고, 지자체가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서 후보군 발굴이나 지구의 개략적 위치와 중장기 발전전략 등 지구 지정의 판단근거를 마련하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에서 지구 규모 및 경계, 사용용도, 지구의 지정, 지정목적에 맞는 사업연계 등 토지이용체계 개편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규정과 계획을 연계하는 운용체계는 현행 지역·지구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토·토지이용관리체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용도지역제를 근간으로 270여 개 관계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등록된 310여 개 지역·지구등으로 이미 분권화되어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규정 및 계획으로 운용된다. 규정으로만 운용하는 경우 표준화된 기준 적용에 따른 경직성이 문제가 되지만, 규정과 계획으로 운용하는 경우는 지역의 자율성과 계획의 유연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예를 들면 자연취락지구, 자연경관지구(「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국토계획법」, 지구계획·지구단위계획), 마을정비구역(「농어촌정비법」, 마을정비계획),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산지관리지역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경관법」, 경관계획), 농공단지(「산업입지법」,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등이 규정과 계획에 의한 운용체계를 따르는 지역·지구등이다.

농촌마을 정주성 보호를 위한 용도 입지규제

농촌 토지이용의 공간적 구성은 생활·생산·자연환경과 관련된 토지이용, 지목으로 보면 대지 전·답·과수·목장용지·공장용지·잡종지·임야등이 그야말로 일체형으로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농촌 토지이용의 고유한 특성이자 토지이용의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여건이기도 하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이러한 여건에서 농촌마을의 정주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용도 순화를 지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4조에서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과의 의제에 의한 용도 및 입지 규제 지원,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3조와 제8조에 따른 별표1에서 아래와 같이 농촌마을 정주기능의 보호 관점 생산 관련 토지이용과의 관계, 농촌위해시설의 입지제한 등을 정하고 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3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①

1. 농촌공간의 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할 것
2. (중간생략)
3. 농촌의 생활기능과 생산기능을 위한 토지의 조화로운 이용을 촉진할 것
(생략)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별표 1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 나. 집단화된 주거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 것
 - 다. 농촌마을보호지구의 경계는 -(생략)-가급적 마을이 분할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 신규 주거지 수요와 농촌위해시설의 근거리 입지 제한 등을 고려하여 마을의 가장 외곽에 있는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완충영역을 포함하여 설정할 것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촌산업지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다만, 녹지지역의 경우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 시설을 집적화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나. 농촌마을 주변에 개별 입지하고 있는 공장, 창고, 제조업소, 농업용 시설 등 소규모 시설의 이전(移轉) 및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일 것
 - 다.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 라.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 (이하 생략)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범위 중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의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의 허용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최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안마시술소(불허로 개정, 2024.2.), 공장(성장관리계획 수립 조건으로 허용 개정, 2024.2.),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제외 불허로 개정, 2023.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조례위임 불허로 개정, 2023.5.)이 대부분 허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촌마을 정주성 보호를 위해 농촌마을보호지구를 규제형 지구로 설정하는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용도를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 기초와 원칙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정주성 보호를 위한 주거 위주 용도 순화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편의서비스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접근성을 고려한 용도혼합 필요성을 다각도로 고려한다. 다만 현재 「국토계획법」에서 관리지역보다 광범위한 용도를 허용하는 자연취락지구와는 차별화된 용도 입지규제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4조는 농촌특화지구와 타법 간의 제관계를 통해 행위규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제정 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정책실무협의를 통해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의제관계의 취락지구 하위유형(가칭 보호취락지구)을 신설하기로 하고, 현재 용도규제 범위와 인센티브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고시하는 즉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축력이 덧입혀지고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도시·군계획 심의절차도 의제되게 된다. 규정은 이러하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적 효력의 간극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시·군 담당부서 간에 이러한 행정업무를 연계한 협력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혼란을 겪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 허용(전체·부분·위임), □: 불허(법·조례)

구분		관리지역			농림 지역	도시지역							자연 취락 지구
		계획	생산	보전		전용주거		일반주거			녹지		
						1종	2종	1종	2종	3종	생산	자연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유사시설*												
	안마시술소												
	이외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일반창고, 냉장·냉동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저장소												
	위험물제조·저장·취급소												
	액화가스 취급·판매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 충전·판매·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기타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양집, 양봉, 양어 포함)												
	가축시설(가축시장 등)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장례시설													
29. 야영장 시설													

출처: 여혜진 외(2023a, p.34) 참고 및 2023~2024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재작성.

* 제조업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024.2.)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공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상향식 계획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기본계획 단계에서 농촌특화지구와 관련된 주민참여 과정이 내실화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자율적 규제에 대한 지원과 보상

농촌마을보호지구가 작동하는 데 중요한 또 한 가지 측면은 자율적 규제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다. 농촌마을보호지구의 규제는 마을의 정주성을 보호하는 의미를 갖지만 분명히 사적 토지소유권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한다. 작년에 수행한 홍성군 장곡면 주민 FGI에서 일부 주민은 국고보조 형식의 인센티브는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마을에 불필요한 시설이 공급될 수도 있는데, 정주성을 훼손하는 특정 용도의 입지를 제한하는 권한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마을의 생활환경과 마을공동체를 ‘보호’하는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토지이용의 갈등을 겪고 있거나 유사한 경험에 있는 마을의 경우 제도의 취지를 빠르게 공감하고 규제를 보호의 의미로 받아들여 운용할 수 있는 현장 작동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국 139개 시·군 1,330개 읍·면의 무수히 많은 마을은 제도의 이해와 수용력이 다르고,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은 피규제집단인 주민이 자율적으로 마을 정주성 보호를 위한 규제를 수용하도록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5조, 제22조에서 정하는 주민제안과 주민협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율적 규제에 대한 보상으로써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2조 9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통한 공간 정비에 관한 사업이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정부는 관련 사업 개발을 추진할 예정인데, 기존 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및 신규 사업 발굴 과정에서 지역수요에 부응하도록 현장에 밀착된 사업모델 설계와 검증을 거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8조, 시행령 제8조는 농촌특화지구의 운용 및 관리방향을 정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단계에서 공청회 이외의 주민참여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의 기능적 분리 및 집약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개로 구성되는 농촌특화지구는 각 지구가 개별적으로 운용되기보다 상호 공간적·기능적 관계를 갖고 운용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축산·농촌융복합산업·재생에너지지구 간 입지적 관계 조정은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의 기능적 분리를 통해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토지이용의 공간적 근접관계를 직주일체형에서 직주근접형으로 전환하고,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집약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의 핵심수단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에 근거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서 운용될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이다. 이는 별표1의 생산 관련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지정기준에서 공통적으로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에 지정’하도록 한 규정의 실행수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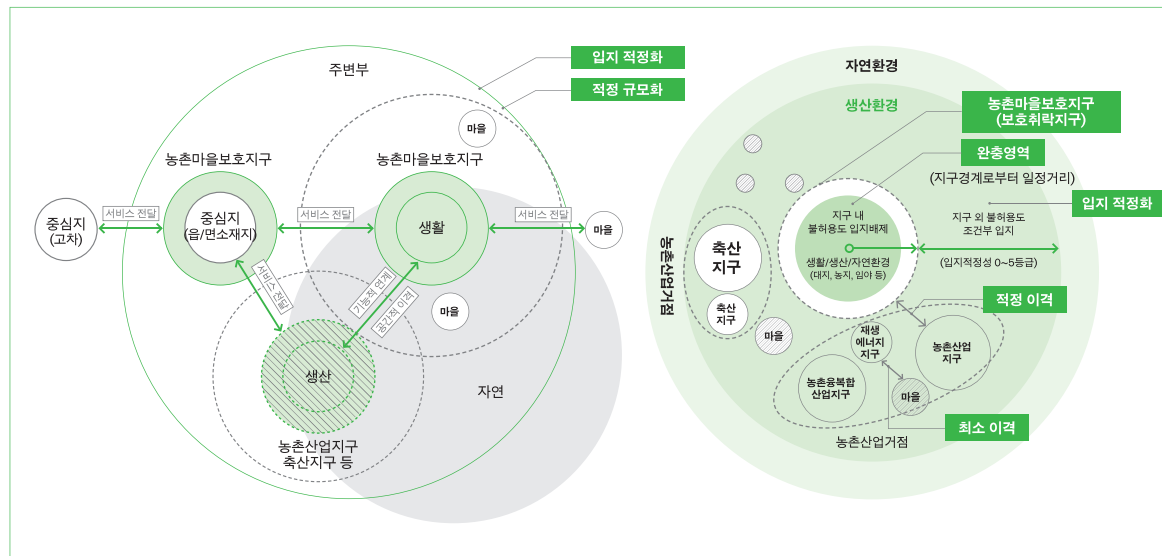
이에 따라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앞서 논의구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토지의 이용목적(use)에 따른 공간적 배치(configuration)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농촌마을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주거지·도로·하천·농지를 보호요소로 설정하고 각 보호요소로부터 이격거리를 등급화하여, 등급별로 생산 관련 농촌특화지구 입지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지구 지정 후보지를 발굴하는 프로세스로 운용된다. 입지가 가능 여부를 정하는 입지판단 유형은 네 가지인데, ‘입지배제’는 최소 이격거리 설정을 통한 마을 정주성 보호 및 토지이용의 기능적 분리를 목적으로 하며, ‘입지조정’, ‘입지관리’, ‘입지허용 가능’은 지자체가 계획 과정에서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입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의 운영과 각 요소의 설정은 지자체 재량에 속한다. 다만 법적불가지역을 포함하여 설정된 0~1등급의 입지배제

운영의 실효성은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의 기능적 분리와 재배치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농촌특화지구 운용을 통해 농촌 토지이용체계를 체계적으로 개편하려면, 지자체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서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토지이용에 기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성과를 창출하도록 국고보조사업 등의 지원체계를 개편하여야 하며, 선정 과정에서 이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편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가 토지이용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합리화·체계화하는 판단근거로서 의미를 갖는다. 참여 주체는 주민과 부채지주, 전업농과 축산농가, 농업인과 비농업인,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등 참여한 이해관계를 가질 것이다. 지역은 농촌과 도시와의 지리적 관계, 중심지 위계와 정주체계,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관계 등 여러 여건에서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최적의 마이크로 조닝(micro-zoning) 과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주거와 산업은 개별 정책의 논의구조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입지적정화와 기능적 연계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논의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읍·면소재지 및 일반마을 대상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개념



출처: 여혜진 외(2023a, p.56)

모든 계획 과정이 그러하듯이 주어진 조건(given condition)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참여 주체가 수용 가능한 조정 범위와 방향을 조율해 가는 방법과 기준은 상당히 다양하고 실험적인 공간계획 접근과 해법을 요구할 것이다. 올해 정부와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건축공간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은 부여군·당진시·순창군·나주시·신안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계획 과정에서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정부, 지원기관, 지자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새로이 도입한 농촌특화지구 운용이 타 지역에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농림축산식품부. (2023.12.2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2 농림축산식품부. (202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지침(안).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시·도 준비상황 점검회의 자료(2024.2.20.)
-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86호(시행 2024.3.29.)
-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5호(시행 2024.3.29.)
- 5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 편. (1999). 토지이용계획론.
- 6 여혜진, 모용원. (2022). 농촌 마을 공간관리를 위한 토지이용의 통합적 관리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7 여혜진.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운용방향. 2023 제3차 AURI 건축도시포럼 발표자료(2023.12.13.)
- 8 여혜진, 김영하, 김지현. (2023a). 농촌형 특화지구 지정기준 설정방안. 농림축산식품부, 건축공간연구원.
- 9 여혜진, 김현중. (2023b).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 10 여혜진, 조준배, 김동근, 모용원, 엄선용, 김영하, 장유진, 박대근, 김수희, 김은하, 최윤진, 김지현, 손하영, 이현승, 장미홍, 황해권, 이희래, 현신명, 정기영. (2023c). 농촌 읍·면소재지 공간 재구조화 전략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건축공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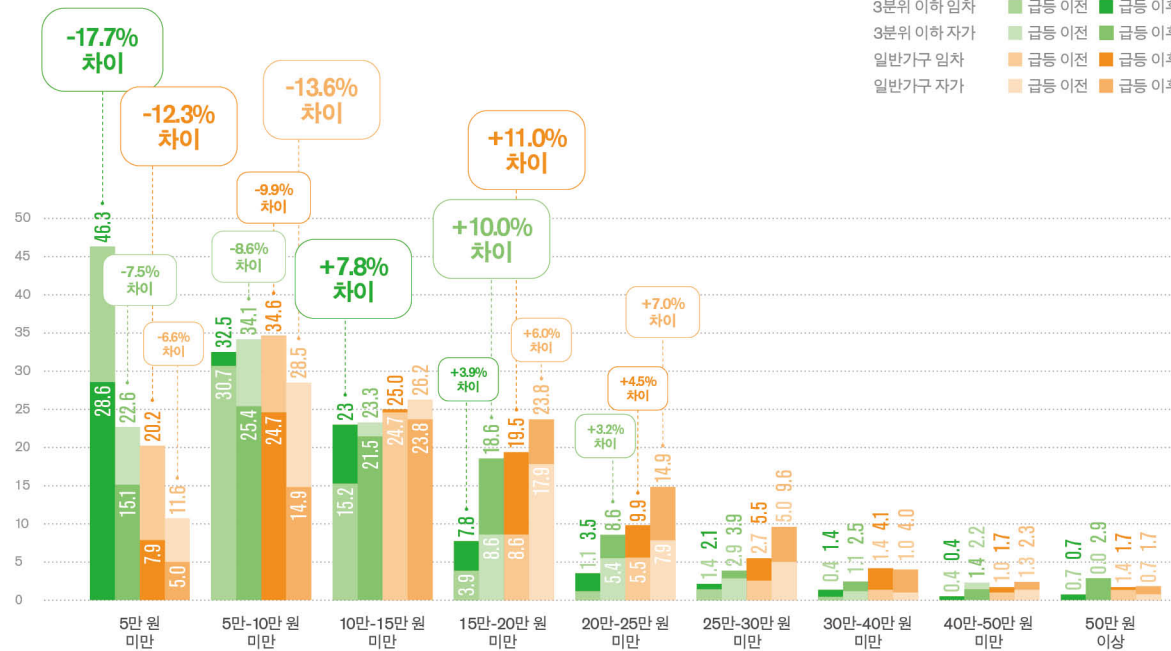
시민들은 따뜻하고 쾌적한 집에 거주하고 있을까?

건축공간연구원은 소득과 주택 점유 형태에 따른 에너지 소비 실태와 집수리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만 30~70세 가구주와 그 배우자 1,1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소득별 구분을 위해 소득 3분위* 이하 가구 562명(자가 가구 279명, 임차 가구 283명)과 일반가구 594명(자가 가구 302명, 임차 가구 292명)으로 표본을 할당하였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2023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실시하였으며, 통계자료실을 통해 조사 및 분석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2023년 1월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지출의 변화는?

(단위: %)

3분위 이하 임차 급등 이전 급등 이후
3분위 이하 자가 급등 이전 급등 이후
일반가구 임차 급등 이전 급등 이후
일반가구 자가 급등 이전 급등 이후



모든 가구에서 난방비 지출이 늘어났으나, 3분위 이하 임차가구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음

난방비 급등으로 기존 10만 원 이하로 난방비를 지출하던 가구수가 줄어들고, 15만 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난방비 상승에 따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가구가 난방비 지출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분위 이하 임차가구는 여전히 5만 원 이하의 적은 난방비로 생활하고 있는 비중이 높으나, 5만 원 이하 지출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등 난방비 급등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해당 3분위는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대비 70% 이내에 속하는 가구. 2023년 기준, 가구원수에 따라 월소득 1인(1,454,524원), 2인(2,419,308원), 3인(3,104,371원), 4인(3,780,675원), 5인(4,431,482원), 6인(5,059,587원), 7인(5,675,261원)으로 산정

여름철 냉방비 사용 양상은?

(단위: %)

3분위 이하 임차(283명) 일반가구 임차(292명)
3분위 이하 자가(279명) 일반가구 자가(30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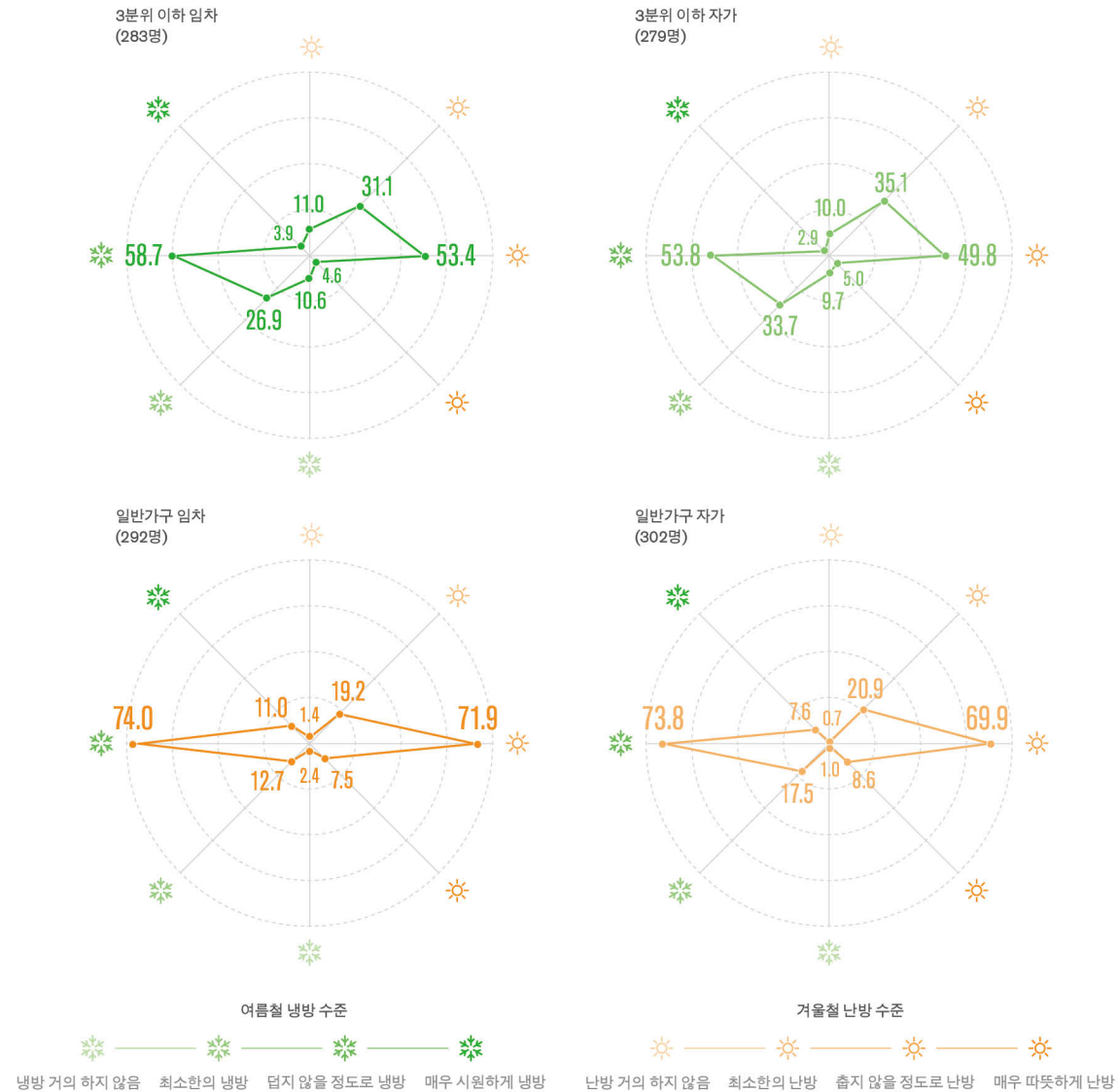


냉방비 지출액이 가장 적은 유형은 3분위 이하 임차가구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냉방비 지출이 증가

가장 낮은 구간인 '1만 원 미만', '1만~2만 원', '2만~3만 원'을 지출하는 가구는 3분위 이하 임차가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후 냉방비 지출액이 높아질수록 3분위 이하 자가가구, 일반가구 임차가구, 일반가구 자가가구 순으로 비중이 높아졌다. 임대·자가에 따른 차이가 냉방비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이 더 필요하나 소득이 높을수록 냉방비 지출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Q 시민들의 냉난방 사용 수준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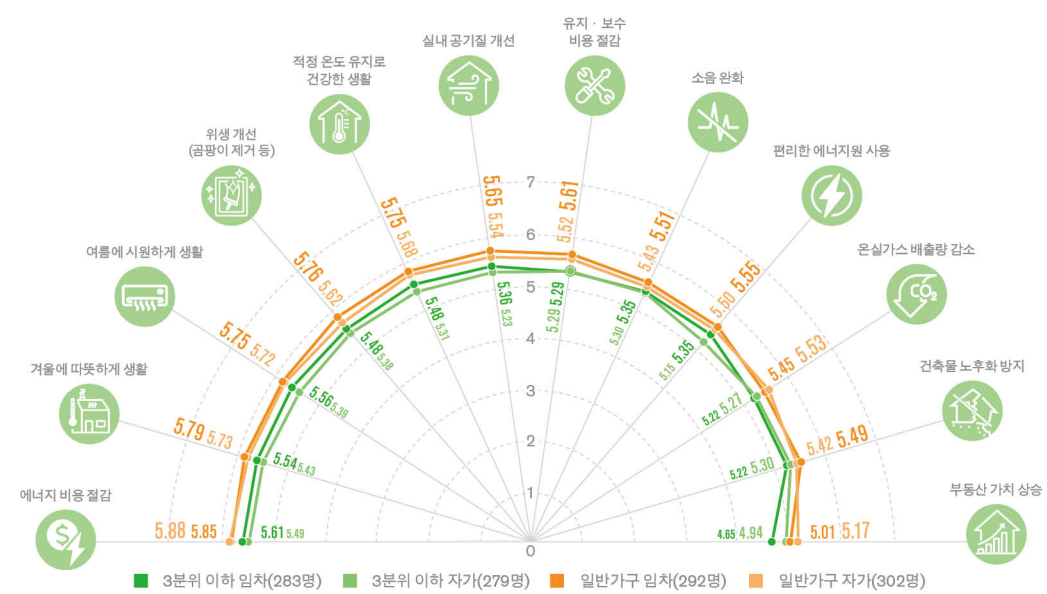


A 냉난방을 거의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냉난방만 하는 가구는 3분위 이하 임차·자가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난방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가 가장 많은 유형은 3분위 이하 임차가구(11%)와 3분위 이하 자가 가구(10%)였다. ‘최소한의 난방’만 한다고 응답한 가구도 3분위 이하 임차가구(31.1%)와 3분위 이하 자가가구(35.1%)에서 높게 나타났다. ‘냉방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가구 또한 3분위 이하 임차가구(10.6%)와 3분위 이하 자가 가구(9.7%)로 나타났으며, ‘최소한의 냉방’을 한다고 응답한 가구도 3분위 이하 임차가구(26.9%)와 3분위 이하 자가 가구(33.7%)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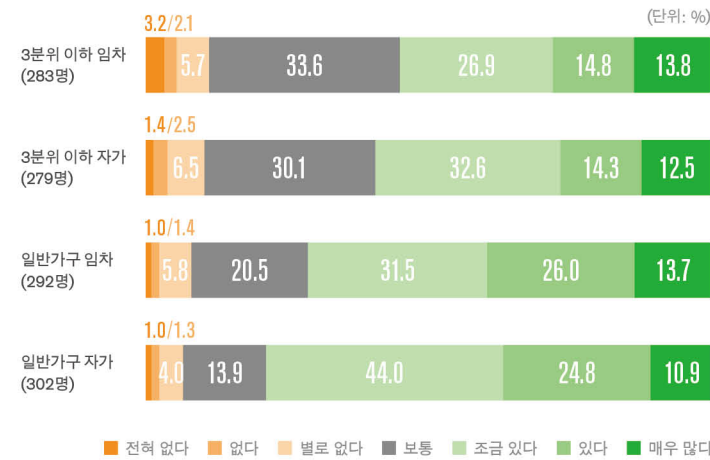
Q 그린리모델링 혜택별 호감도는?

(단위: 점, 7점 평균)



A 전 가구 유형에서 ‘에너지 비용 절감’에 큰 호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낮은 호감을 보임

그린리모델링 혜택에 대한 호감도는 전반적으로 일반가구에서 3분위 이하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전 가구 유형에서 ‘에너지 비용 절감’에 상대적으로 큰 호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



Q 그린리모델링 참여 의향은?

A 그린리모델링 참여 의향이 가장 높은 유형은 일반 가구 자가가구였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 의향이 높음

그린리모델링 정책 시행 시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일반가구 자가가구에서 7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가구 임차가구에서 71.2%를 보였다. 반면 3분위 이하 자가가구는 59.5%, 3분위 이하 임차가구는 55.5%로 낮은 의향을 나타냈다. 한편 임차를 함에 따라 공사에 제약이 있는 일반가구 임차가구가 3분위 이하 자가가구보다 참여 의향이 높았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그린리모델링 정책에 참여할 의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건축 도시 동향

건축과 도시공간

—
Vol.53
Spring 2024

Trend Report

미국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계 가이드라인과 시사점 | 전기차 확산을 위해 충전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충전시설은 한정된 도시공간 내에서 구축되며,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폴란드의 공유유산 정책: 역사를 공유하는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 공유유산 개념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면서, 각 국가의 여건에 맞게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하여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역사를 공유하는 접경지역의 유산을 공유유산으로서 보존관리하는 폴란드의 공유유산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지역의 매력과 변화를 만드는 로컬브랜딩 | 삶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모든 결정들이 모여 매력 있는 생활양식이 된다. 로컬은 어느 특정한 도시나 장소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또 다른 선택, 새로운 경험, 없었던 생각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이라면 어디나 로컬이고 로컬을 만드는 사람들은 창조 커뮤니티이다.

해외

미국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계
가이드라인과 시사점
042

폴란드의 공유유산 정책:
역사를 공유하는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046

국내

우리만의 방식으로
지역의 매력과
변화를 만드는 로컬브랜딩
051

2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전기차 충전설비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보다 포용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도록 조성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 주목해본다. 폴란드는 현재의 국경 형태를 갖기까지 인접한 중동부 유럽 여러 국가와 함께 국경 변화를 겪어 왔다. 역사와 문화유산을 공유하게 된 국가들과 함께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폴란드의 공유유산 정책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다.

국내동향으로는 정부의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의 진행 현황을 살펴보고, 지방소멸의 대응책이자 지역 활성화의 새로운 방안으로 로컬브랜딩의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Made by 약사원 메이커



Cooperwood Senior Living



완공된 정계천·정릉천 구간 보행·자전거 전용교



미국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계 가이드라인과 시사점

권오규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장점을 가진 전기차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전기차 확산은 미래 모빌리티 환경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동시에 한정된 도시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는 이미 주택,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위치 선정, 부지 확보, 전력공급 및 안전성 확보, 유지·관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 설계 고려요소를 바탕으로 토지이용 특성별 충전시설 설계 방향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설계 권장사항을 수립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살펴본다.

교통 및 기후 이니셔티브(TCI)* 전기차 충전시설 배치 및 설계 가이드라인

2011년 TCI는 개발사업자, 주택 소유자, 전기차 충전사업자, 전기 공급업체, 지방정부 등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부지 선정 및 설계 시 주요 이슈를 정리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배치 및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크게 사이트 디자인 요소와 설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이트 디자인 요소는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 가시성, 설치 사용자 및 일반 대중을 위한 안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보 송수신 네트워크, 전력 그리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결 등 데이터 수집·분석 단말기의 특성과 전기시설의

* 교통 및 기후 이니셔티브(Transportation&Climate Initiative: TCI): 교통 개선, 청정 에너지 경제 개발 및 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량 감소를 추구하는 북동부 및 중부 대서양 13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지역 연합체

특성을 함께 고려한다. 이 사항들은 주차공간에서 도시 규모에 이르는 다양한 공간적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설치 시나리오에 따라 지상 주차장, 노상 주차장, 주차데크 또는 개인용 차고, 사업용 운송트럭 등 다양한 장소별·용도별 전기차 충전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공간에 적합한 전기차 충전시설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위치(location)와 설치(installation)에 따라 전원 공급장치와의 근접성, 주차공간 크기 및 방향, 보행자 통행, 조명 및 가시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다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기 설비 기능의 표준화와 충전시설의 미적 요소에 대한 사항은 기술발전 상황과 설치 및 이용자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이트 선정

충전시설 사이트 선정에는 전원연결, 네트워크 및 통신, 기존 인프라, 충전기 인터페이스 등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중 충전기 인터페이스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운영, 사용 및 관리 등 충전 행위 전 과정에 걸쳐 각 주체 간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인터페이스는 네트워크, 도시, 전원, 충전 등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인터페이스별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인터페이스별 주요 요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도시 인터페이스	전원 인터페이스	주차 인터페이스	충전 인터페이스
·물리적 네트워크 ·집행 메커니즘 ·네트워크 통신 ·기술 ·과금 등	·교통접근성 ·표지판 및 길 안내 ·건물 출입구 접근성 ·보행자 통행 ·공간 관리 등	·전기용량 ·공사비 ·전원 근접성 ·계약(호스트-운영자) ·과금 등	·표지판 및 길찾기 ·주차공간 크기 ·마운팅 방식 ·조명 ·접근성 등	·충전 경험 ·마운팅 접근법 ·커넥터 수 ·접근성 ·표지판 및 길찾기 ·기술 등

출처: TCI(2011, pp.6~12) 저자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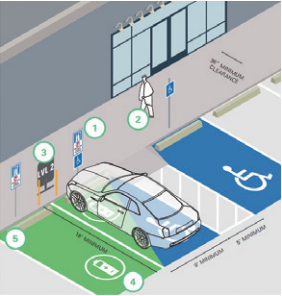
사이트 디자인 요소

충전시설 사이트 디자인 요소는 설치(Installation), 접근성(Access), 운영(Operation)으로 구분하였다. 설치 요소는 사이트 계획 및 설계 시 충전레벨(충전 용량 및 속도), 전원 접근성, 주차공간 크기, 기술 수준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접근성은 기술적·물리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어 통신 네트워크 무선 연결, 사용자 접근성, 교통접근성, 조명, 보행자 통행 등의 요소로 정리된다. 운영 요소는 운영자의 장기 목표인 수익 실현과 일상적인 사용을 고려하는 요소로 충전사업자 계약, 가시성, 주차장 내 위치, 과금, 체류시간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사이트 디자인 요소는 설치 장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도시공간 내 설치 장소별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업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소비자)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며, 충전시설 주변을 지나 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디자인이 요구된다. 공동주택의 충전시설 사이트 디자인은 모든 토지이용 유형 중에서 가장 복잡하다. 거주민의 전기차 충전시설 필요량 산정에서부터 주차장 내 위치 선정, 전원 근접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차면과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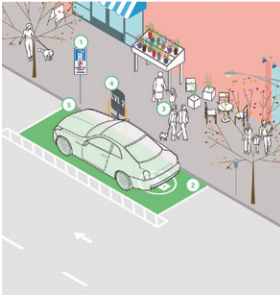
사이트 디자인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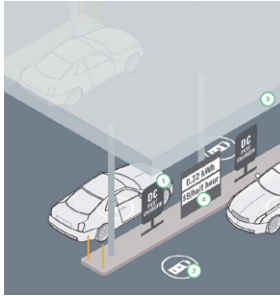
상업시설(Commercial Lot)
출처: TCI(2011)



공동주택(Multi-Unit Residential)



노상 주차장(On-Street Parking)



전용충전소(Service Station)

충전소는 기존 주유소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충전하는 동안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엑세스위원회* 접근 가능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계 권장사항

미국 엑세스위원회(Access Board)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및 건축장애물법(Architectural Barriers Act: ABA)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 권장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기관, 공원 및 연방정부에서 사용하는 차량충전소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용 차량 충전소 등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ADA 및 ABA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특별 설계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장애인 이용을 보장을 위해 설계 시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장비를 사용하는 장애인 운전자의 접근성, 사용 편의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 고려사항은 차량 출입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충전시설 접근 경로에 장애물 배제, 충전시설 주변의 자유로운 이동 및 명확한 경로, 건물 입구와의 근접성 등 접근 및 활동 편의성이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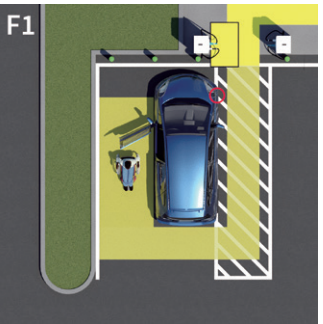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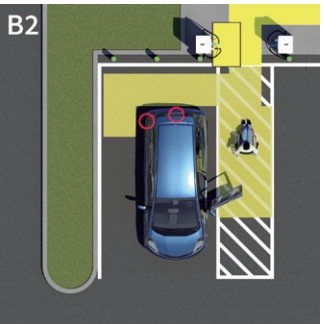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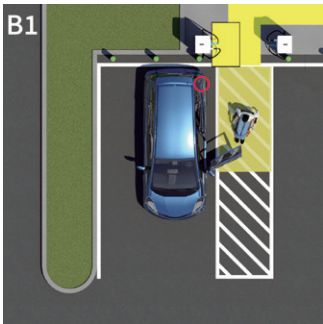
보되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충전공간과 주차공간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장애인 운전자가 전기차를 충전하는 경우 이동경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충전시설 설계 원칙을 제시한다.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나와 충전기로 이동한 후 충전 커넥터를 차량으로 다시 가져가야 한다. 휠체어 및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운전자의 경우에는 승하차 공간, 전기차 충전기 단말기 조작공간, 충전 커넥트 연결을 위한 이동공간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단말기 및 케이블 커넥트 등 주요 조작부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도달 가능한 범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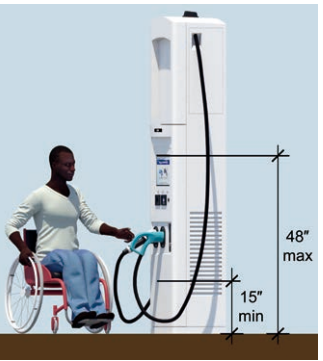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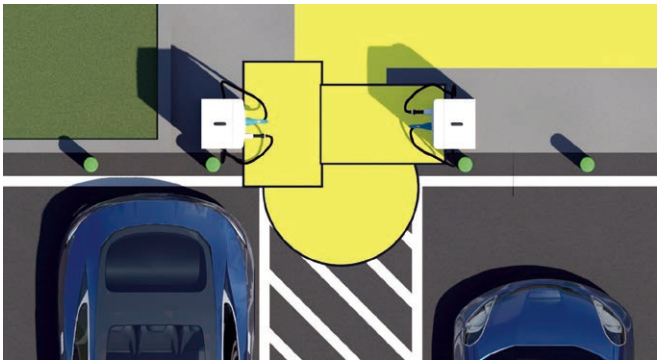
나오며

전기차 확산을 위해서는 충전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충전시설은 한정된 도시공간 내에서 구축되며, 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

* 미국 독립연방기관으로 미국장애인법(ADA)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건축환경, 대중교통, 공공통행권 등의 접근성 보상을 위한 설계기 준수 및 시행
** U.S. Access Board(2023.7.17.), <https://www.access-board.gov/tad/ev/#types-of-ev-charging-stations-that-must-be-accessible>



전기차
충전동선을
고려한
설계



도달 범위 내
작동 가능한
충전시설 설계

미국 엑세스위원회 권장사항 주요 내용
출처: U.S. Access Board(2023.7.17.)

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계획 및 설계에서 접근성, 사용자 편의성, 안전성, 그리고 특히 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설계 방향은 사회적 포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시설은 민간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토지주(또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전기시설 규격 및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있다. 관련 지침은 전기차 충전사업 및 전기시설 설치와 운영관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공간의 효율적 사용의 관점에서 충전시설의

이용 편의성 및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설계 방향의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도시 구조와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1 TCI. (2011). Siting and Design Guidelines for EV Equipment.
- 2 U.S. Access Board. (2023.7.17.) Design Recommendations for Accessible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s. <https://www.access-board.gov/tad/ev/#types-of-ev-charging-stations-that-must-be-accessible>

폴란드의 공유유산 정책: 역사를 공유하는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손은신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지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들어가며

2000년대 이후 유네스코(UNESCO), 이코모스(ICOMOS) 등 문화유산 관련 국제기구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공유유산(shared heritage)은 통상적으로 ‘국가 간 문화유산의 가치 공유’라는 기조로 제시된 용어로서,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된 개념은 아니다. 이에 공유유산은 인류 전체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하는 세계유산의 경우를 비롯하여 문화적·지역적으로 여러 국가에 속해 있는 연속유산·초국경유산 등을 지칭하는 경우, 지리적·문화적 여건 등에 의해 형성된 다문화·다국적 유산의 가치를 함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등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공유유산 개념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면서, 각 국가의 여건에 맞게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하여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공유유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국가 중 역사를 공유하는 접경지역의 유산을 공유유산으로서 보존·관리하는 폴란드의 공유유산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폴란드 공유유산 정책 추진 배경 및 사업체계**

폴란드,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독일 등 중부 및 동부 유럽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경 변화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지역이다. 따라서 폴란드의 역사 유산이 리투아니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영토에 있기도 하며, 독일 유산이 폴란드 국경 내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해당 국가들은 ‘국경 변화

* 이 글은 건축공간연구원에서 2023년 기본과제로 수행한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정책 연구>(손은신·이규철·송인현·박채린·김지혜·임종현)를 바탕으로 재정리하였다.

** 폴란드의 사업 관련 내용은 Cielatkowska(2008), Herych(2014)를 주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에 따라 역사적 건축물이 쇠락하거나 정체성과 장소정신을 잃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에 1992년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정부의 문화유산 보호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폴란드-우크라이나-벨라루스 등 인접 국가들이 폴란드를 중심으로 공유유산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1992년 체결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정부 간 문화유산 보호 협정에서는 보물, 문화재, 기록물, 도서관 자료 등을 대상으로 자료의 수집·보존·복원·재구성·접근성 관련 부문에 대해 협력을 약속하였다. 또한 폴란드 국경 밖 문화유산에 대한 목록화, 사진·측량 등 복구를 위한 기초 연구, 유산의 복원·복구 지원, 출판, 국제회의, 전시, 대중 홍보를 통한 정보 및 지식 전파 등의 사업 목표를 마련한 바 있다.

현재 폴란드의 공유유산 사업은 문화 및 국가유산부(Ministry of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 of Poland)에서 주관하는 정부주도 사업이며,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가 협력 관계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 시행은 폴란드 국가유산 이사회(National Heritage Board of Poland), 바르샤바 예술학교(Warsaw Academy of Arts) 등 전문가 집단·기관 및 소재국 내 관련 부처가 함께 협력하여 수행한다.

폴란드의 주요 공유유산 사업

폴란드의 공유유산 사업은 인벤토리 구축 및 유산 조사, 중요 역사적 건축물의 복구·복원 지원, 전담기구 설립, 초국경 협력 프로그램 지원,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다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유유산 사업 대상지 및 대상 국가를 기준으로 폴란드의 주요 공유유산 사업을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소개한다.

리비우 역사지구 내 주요 건축유산 보존·복구

리비우 역사지구(L’viv-the Ensemble of the Historic Centre)는 1998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크라이나의 세계문화유산이다. 리비우는 도시구조 및 건축양식에 이탈리아·독일과 동유럽의 전통이 융합되어 있으며, 도시에 다양한 문화와 종교 전통을 가진 소수민족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국가의 역사적 층위가 결합한 도시 팔림프세스트(palimpsest)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특히 리비우 역사지구의 형성은 폴란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리비우는 과거 폴란드에 400년 동안 속해 있던 지역으로, 1941년 독일에 점령되었다가 이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공화국에 포함되었고, 1991년 우크라이나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리비우 지역에는 다수의 폴란드 유산이 남아 있어 공유유산으로서 유산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리비우 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여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공동으로 ‘다문화 유산의 보존과 수리(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ulticultural heritage)’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심포지엄 이후 리비우 역사지구 내 폴란드 관련 건축물에 대한 인벤토리가 구축되었다. 2014년에는 폴란드에서 400만 즈위티(약 12억 8,000만 원)를 지원하여 Garrison 교회를 비롯한 주요 건축물의 복구 및 복원 사업을 지원하였다. 특히 리비우 역사지구 내 건축유산의 다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관련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하여 연구와 함께 복구 작업을 수행하였다. 예산의 경우 폴란드의 문화 및 국가유산부가 주로 지원하였으나, 리비우시 역사환경부에서도 기금을 지원하였고 일부는 기부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리비우 Garrison 교회 공사 현장(좌) 및 리노베이션 이전(우) 모습
출처: 유로메이단 홈페이지. <https://euromaidanpress.com/2021/11/17/international-project-renovates-priceless-frescoes-in-historic-garrison-church-in-lviv>(검색일: 2023.10.20.)

특히 2022년 이후에는 전쟁으로 위협에 처한 우크라이나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폴란드 문화 및 국가유산부에서 우크라이나 문화지원센터(Support Center for Culture in Ukraine)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센터 운영에는 폴란드 국립문화유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조직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조브크바 문화유산 조사·보수 및 국제센터 설립
우크라이나의 조브크바(Zhovkva)는 ‘이상 도시’라는 이탈리아 건축 이론을 적용하여 설계한 폴란드 세계유산인 자모시치(Zamość)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 도시이다. 2000년경 폴란드의 자모시치 보존·복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와 유사한 도시인 우크라이나 조브크바의 문화유산 보호에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조브크바 공유유산 사업의 주요 꼭지로는 문화유산 조사 및 보수와 함께 전담기구로서 국제센터 설



조브크바 성 건물 파사드의 사진 측량 작업
출처: Herych(2014, p.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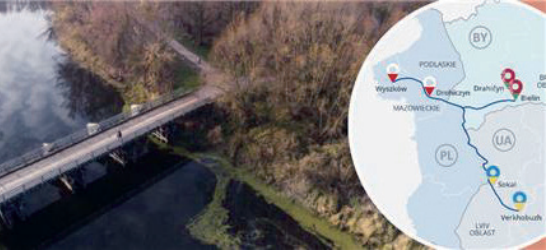
립을 들 수 있다. 2000년 조브크바시는 폴란드의 문화 및 국가유산부와 공동으로 문화유산 조사 및 보수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조브크바 성, 조브크바 대학, 옛 도미니카 수도원, 예수교회와 바실리안 수도원 등 역사적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물 사진 측량, 보존 상태 측량, 역사 연구, 실내·외 보수 및 복원, 역사기록 사본 구입 등이 수행되었다.

2008년에는 조브크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in Zhovkva)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에서는 문화유산의 보호·보존·이용과 관련하여 유산관리자 및 이용자를 위한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폴란드 공동 세미나 및 국제회의, 공동 여름학기 학생 실습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다.

폴란드-벨라루스-우크라이나 공유유산 협력 프로그램*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연합 커뮤니티 이니셔티브(EU Community Initiatives)의 일환으로 폴란드·벨라루스·우크라이나의 3개국 협력 공유유산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유럽연합(EU)은 2000년부터 국경을 넘어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커뮤니티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좋은 이웃(Good Neighbourhood)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관련 보조금을 지원한다.**

- * 폴란드-벨라루스-우크라이나 협력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pbu2020.eu>(검색일: 2023.10.22.); 유럽연합 Interreg 홈페이지. <https://interreg.eu/programme/cross-border-cooperation-programme-poland-belarus-ukraine>(검색일: 2023.10.22.) 참고하여 작성
- ** 다만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벨라루스에 대한 유럽연합 제재로 인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는 폴란드-우크라이나 초국경 협력 프로그램(Cross-border Cooperation Programme)을 운영 중이다.



버그강의 카약 관광 물길 트레일 사례
출처: 유럽연합 Interreg 홈페이지. <https://interreg.eu/programme/cross-border-cooperation-programme-poland-belarus-ukraine>(검색일: 2023.10.22.)

특히 유럽연합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최근 수년 동안 국경을 넘어 협력을 통해 문화유산과 관련된 공통의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지역 문화와 역사적 유산, 자연유산 등의 활용과 보존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까지 공동으로 지원을 받았던 폴란드·우크라이나·벨라루스는 보조금을 통해 두 국가 또는 세 국가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였다. 이러한 공유유산 협력 프로그램의 결과로, 버그강의 카약 관광 물길 트레일 개발(Bug Unites Us—creation of two cross-border touristic kayak trails), 폴란드와 벨라루스 간 청소년 및 창의그룹 근거지 마련을 위한 공유 문화유산 복원, 문화유산 및 역사유산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센터 설립 등을 지원하였다.

세계유산 공동 등재, 카르파티아 지역의 목조 체르크바(Wooden Tserkvas of the Carpathian Region in Poland and Ukraine)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령 카르파티아산맥에 걸쳐 있는 16개의 교회는 2013년 세계유산인 ‘카르파티아 지역의 목조 체르크바(Wooden Tserkvas of the Carpathian Region in Poland and Ukraine)’로 등재되었다. 체르크바(정교회 교회)란 통나무 가로썹기 공법으로 건축한 교회를 뜻하며, 과거 슬라브 지



카르파티아 지역의 목조 체르크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및 위치
출처: Herych(2014, p.88)

역에서 널리 유행한 건축양식이다.
세계유산 등재 준비 시 우크라이나 조브크바 국제센터와 폴란드 바르샤바 국가유산위원회가 함께 참여하였으며, 초국경 연속유산으로서 등재 이후 관리 및 운영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문화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통합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서 담당하고 있다.

나오며
문화재청은 2023년 국외소재문화재를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소재국이 이를 ‘공동의 유산’으로 함께 인식하고 보호하는 ‘K-공유유산’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건축물·장소 등의 국외사적지는 부동산 유산의 특성상 환수가 거의 불가능하며, 해외 국가에 위치하여 유지·관리가 쉽지 않아 멸실·훼손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K-공유유산 정책은 국외소재문화재 중 소재국과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유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소재국이 공동으로 보호·활용을 추진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를 국제협력 및 교류의 매개체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폴란드의 공유유산 정책 추진 사례는 국내 K-공유유산 정책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세 가

지 시사점을 지닌다. 첫 번째는 폴란드의 문화 및 국가유산부를 중심으로 수행된 정부 주도형 공유유산 정책 사업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로 다양한 유형의 공유유산 프로그램을 수행·지원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가 간 협약을 계기로 시작된 폴란드의 공유유산 정책은 이후 역사지구 내 중요 건축물의 복원·보수, 조사 및 기록화에 이어 전담기구로서 국제센터 설립·운영,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국가 간 협력 프로그램 운영,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 다양한 사업 유형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상호 긍정적인 유산을 대상으로 공유유산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유유산의 개념은 다문화·다국적 유산을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용례의 경우 과거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의 관련 유산을 보호하는 패러다임으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적 지적이 있다.*

폴란드 공유유산 사업의 경우 인접 국가 간 국경 변경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접경지역에 다문화·다국적 문화유산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유산을 상호 긍정적 측면에서 해석하고 공유유산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국내 K-공유유산 사업 추진에 시사점을 지닌다.

* 일례로 이코모스는 1998년부터 공유건축유산 국제학술위원회 (ISCSBH)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위원회는 개설 후 2002년까지 공유식민지건축(Shared Colonial Architecture) 학술 위원회로 운영되었다가 이후 ‘공유건축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역사적 배경이 감춰지는 것을 우려, 이코모스 회원국들의 반대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 주도하에 전 세계 20여 개국을 대상으로 공유유산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국가 중 하나로 사업 유형과 추진 사업모델 등은 주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으나, 과거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국가 소재의 유산을 다수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는 대한민국의 K-공유유산에 적확하게 대응시키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참고문헌

1 손은신, 이규철, 송인현, 박채린, 길지혜, 임종현. (2023).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정책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2 유럽연합 Interreg 홈페이지. <https://interreg.eu/programme/cross-border-cooperation-programme-poland-belarus-ukraine>(검색일: 2023.10.22.)

3 유로메이단 홈페이지. <https://euromaidanpress.com/2021/11/17/international-project-renovates-priceless-frescoes-in-historic-garrison-church-in-lviv>(검색일: 2023.10.20.)

4 폴란드-벨라루스-우크라이나 협력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s://pbu2020.eu>(검색일: 2023.10.22.)

5 Cielatkowska, R. (2008). Instead of an Introduction. In 16th ICOMOS General Assembly and International Symposium Proceeding.

6 Herych, V. (2014). Polish-Ukrainian Cooperation Concerning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on the Example of the City of Zhovkva (Ukraine). *Barometr Regionalny*, 12(4): 81-90.

국내동향

우리만의 방식으로 지역의 매력과 변화를 만드는 로컬브랜딩

박정환
춘천사회혁신센터 센터장

로컬브랜딩의 배경: 지방소멸과 로컬의 부상

이름이 중요한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자식 이름 짓는 것만큼이나 신중하게 상호를 고민한다. 재미있는 연구가 있다. 2018년에 발표된 ‘치과 의원 상호명의 시대적 변화’라는 논문이다. 1946년부터 2016년까지 70년 동안 인허가를 받은 전국의 모든 치과의원 2만 1,686개의 상호 빅데이터를 분석해 시대적 상황을 들여다본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전국에서 개업한 치과병원들이 이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단연 ‘서울’이었다. 검색해 보니 내가 살고 있는 춘천에도 ‘서울’이 들어간 치과 간판이 최소한 9개는 걸려 있는 것 같다. 치과뿐만 아니다. 우리 도시 안의 떡집, 농약사, 수선집, 해장국집 등 많은 소상공인이 ‘서울’을 내세운 상호를 쓰고 있다. 우리에게 서울은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며 새로운 기회가 많은 매력적인 곳으로 생각되기 때문일까? 풍요와 편리와 매력을 담은 서울은 언제나 지방에서 우선하는 지향이었다. 어쩌면 지방소멸은 한국인의 간판에서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방이라는 말 대신 지역이라는 말을 쓰자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은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서울이 아닌 모든 지역을 변방으로 보는 차별적 시선이 담겨 있으므로, 수평적이고 중립적인 ‘지역’이라는 단어로 바꿔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총인구의 52%가 거주하고 대기업 본사 80%와 정부투자기관 89%를 서울권이 독식하는 현실에서 글자 한 자 바뀌 쓴다고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로컬’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다. 사전적으로 따지자면 영어인 Local을 우리말의 지방이나 지역으로 바꿔도 무방하겠지만 굳이 로컬이라는 외래어를 고집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담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방과 지역은 대개 행정관할권으로 구획되는 공간적 개념이다. 로컬이 지방이나 지역과 다른

개념이 되는 것은 공간적 구분을 넘어 지역이 가진 고유한 환경과 사람들의 생활양식이나 정서처럼 그 지역의 차별적인 ‘방식’이 담길 때이다.

행정안전부의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행정안전부는 지역 고유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과 활력을 만들고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이하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로컬브랜딩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환경, 자원, 사람들로부터 나온 고유한 방식을 기반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과정과 결과를 뜻한다. 이를 통하여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 밖 사람들의

호기심과 선택을 이끌어 내고 지역 안 주민들의 자부심과 애착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책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자생적인 창조역량 강화(국정과제 119)’를 위해 지역의 주인공이자 자신의 강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구성원 스스로가 매력 있는 자원을 찾고 활성화하여 지역만의 강점과 특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로컬브랜딩 사업은 생활권과 창조 커뮤니티를 강조한다. 행정구역에서 벗어나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적인 공간인 ‘생활권’을 단위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역 현장에 맞는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원 종료 후에도 자생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구성원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추진과 창조

커뮤니티 조성을 중요시한다. 창조 커뮤니티는 지역의 차별적인 정체성과 생활양식을 공유하면서 활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우선과제를 설정하여 로컬 브랜딩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개인 및 공동체로서 주민, 소상공인, 중간지원조직, 행정 등 생활권 내 구성원 참여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에 애정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권 외의 예술가, 청년 기획자, 언론사 등에도 열려 있다.

2023년 로컬브랜딩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10개 지역을 살펴보면, 모두 개별 생활권만의 매력 있는 자원에 기반하여 저마다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한 후 추진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인 전북 장수군은 지역 내 70%를 차지하고 있는 산을 활용하여 트레일 러닝의 명소로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있고, 충주 관아골은 주민과 창업가로 이루어진 창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생생한 창업 노하우와 정착 경험을 전수하는 창업캠프 등을 마련하여 창업·정착을 활성화함으로써 침체된 원도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춘천에 머무르고 싶은 이유를 만드는 ‘Made by 약사천’

춘천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로컬브랜딩 사업에 선정되었다. 사업 대상지는 약사천 일대 마을이며, ‘춘천다운 라이프스타일을 상상하고 만드는 메이커 마을’을 로컬브랜딩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약사천 마을은 과거 춘천의 경제·행정·문화 등 주민 생활의 핵심 터전이었으나 현재는 인구와 사업체가 감소하고 공폐가는 증가하는 등 생활 인프라의 쇠퇴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층 아파트를 새로 짓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인근 생활권과 달리 약사천 사람들은 오래된 마을의 원형과 공동체의 가치를 보존하는 ‘재생’을 스스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 수십 층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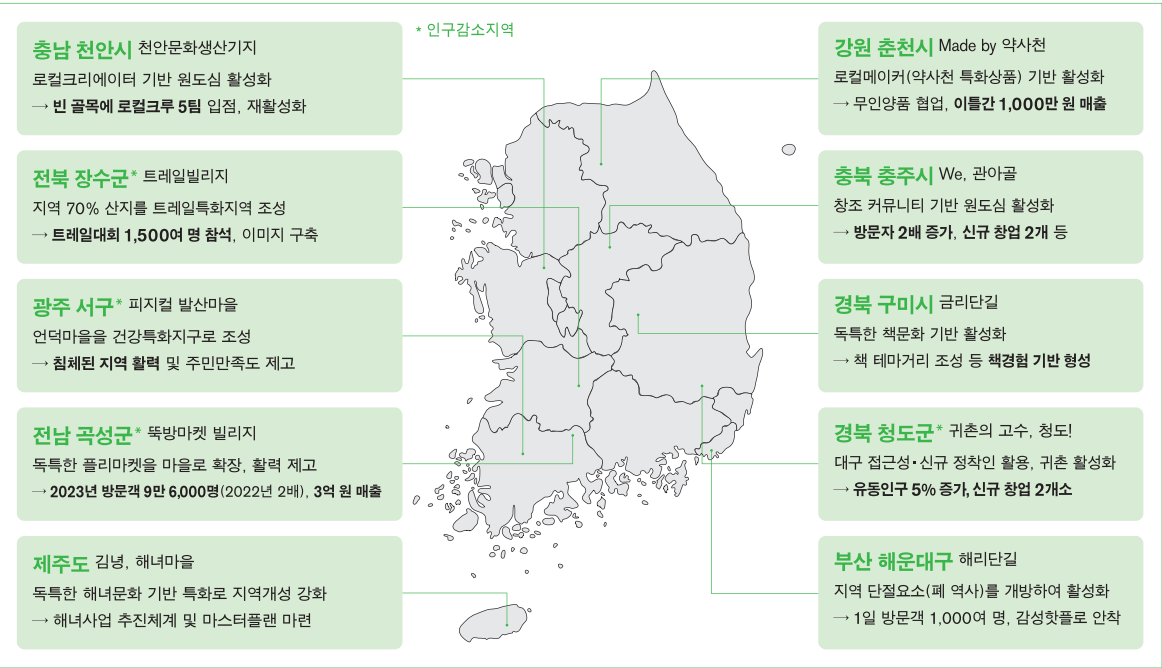
약사천 야경



Made by 약사천 모집 포스터



Made by 약사천 제품들



2023년도 선정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10개소 현황



Made by
약사천 메이커

리 아파트들이 약사천을 둘러싸고 있지만 약사천 마을은 호젓한 골목길과 생태하천, 공동체 등 춘천다운 유산을 품게 되었다.

과거 약사천을 건너 약사고개를 오르기 직전 오른쪽 동네로 진입해야 하는 어정쩡한 자리에 주차장이 있었다. 꼬불꼬불한 좁은 골목 집 앞까지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형편 때문에 만든 주민 공용 주차장이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너무 뽕뽕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빈자리 한두 개는 금방 찾을 수 있는 마을의 공유 지대였다. 그런데 약사천 사람들은 주차장을 포기하고 마을 작업장을 짓기로 하였다. 자꾸만 늘어나는 자동차를 골목으로 들이는 대신 동네 주민들이 만들어서 신뢰를 줄 수 있고 약사천의 영감과 자원을 활용한 수제품을 만드는 작업장을 만들었다. ‘수공업 팩토리’라고 이름도 붙였다. 이제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는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다.

춘천의 로컬 메이커들이 약사천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 흥하였던 약방거리에서 영감을 얻어 쌍화 맥주를 만드는 크래프트 맥주 메이커, 마을의 풀과 나무로 새로운 멋을 만드는 라이프스타일 굿즈 메이커, 오래된 기름집과 함께 춘천의 향과 느낌을 만드는 친환경 비누 메이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3D 베이킹 메이커, 지역의 재료로 약사천 사람들의 감각이 담긴 가구를 만드는 로컬우드 메이커가 약사천 마을의 방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들은 ‘Made by 약사천’ 메이커이다.

남다른 생각으로 만들고 다 같이 생각하며 쓰는 약사천 작업장은 춘천만의 방식을 쌓아 나가는 곳이다. 다른 곳은 아파트와 빌딩처럼 수직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하지만 Made by 약사천은 물, 나무, 골목과 사람들까지 수평으로 성숙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우리 도시의 원형에서 영감을 얻어 제품을

만든다. 약사천처럼 작은 동네가 규모와 크기만을 좇아서는 이기지 못한다. 바꾸고자 상상하는 가까운 미래의 모습과 변화의 방식,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살고 있는 로컬과 강하게 연결할 때 남다른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 높은 빌딩에서 일하는 전문가나 대도시의 스마트한 인프라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태도와 관계를 지역사회에서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로컬브랜딩이라고 한다면 약사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메이커들이 많아질 때 그들의 개인적인 라이프스타일은 물론 지역의 변화까지도 만들 수 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변화를 만드는 로컬

제주에는 순대를 고추냉이 간장에 찍어 먹는다. 부산은 막장에 찍고 곡성은 초고추장에 찍고 춘천은 새우젓에 찍어 먹는다. 로컬 소스(Local Sauce)이다. 한국 사람에게는 특별할 것 없는 간장·고추장·새우젓이지만 로컬 사람들 젓가락이 찾아가는 다른 접시들을 보면 호기심이 생긴다. 그렇지만 다르게 먹는 차이만으로 로컬의 매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만드는가, 무엇으로 버는가, 어디에 사는가, 누구에게 기대는가 등 삶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모든 결정들이 모여 매력 있는 생활양식이 된다. 로컬은 어느 특정한 도시나 장소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또 다른 선택, 새로운 경험, 없었던 생각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이라면 어디나 로컬이고 로컬을 만드는 사람들은 창조 커뮤니티가 된다.

시간과 공간이 거의 동시간대에 구성되는 현대사회의 생활양식은 획일화되고 있다. 미디어가 만든 유행이 잠깐 다름을 보여주지만 결국 다시 하나로 수렴된다. 돌아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로컬은 자기만의 이유와 여유로 자기만의 방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뉴욕의 생활이 뉴요커를 만들고, 베를

린의 방식을 찾은 사람이 베를리너가 되고, 파리의 감각을 보여주는 이가 파리지앵이다. 한국에서도 남다른 생활과 방식 그리고 감각을 찾아 창의적인 사람들이 골목으로 몰려든다. 소박하지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단순히 설비와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수작업을 통해 생산한 상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태도와 문화가 담긴 것을 만드는 로컬을 만나고 싶어 한다. 자신만의 생각과 취향을 담아 개성 있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로컬브랜딩이다. 사람들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도시를 더 재미있게 만들고 세상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우리만의 방식, 로컬의 방식이 보다 분명해지는 로컬브랜딩을 통해 더 큰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

참고문헌

- 1 지방시대위원회. (2023).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 2 유수빈, 송봉규, 양병은. (2018). 치과의원 상호명의 시대적 변화,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제56권 제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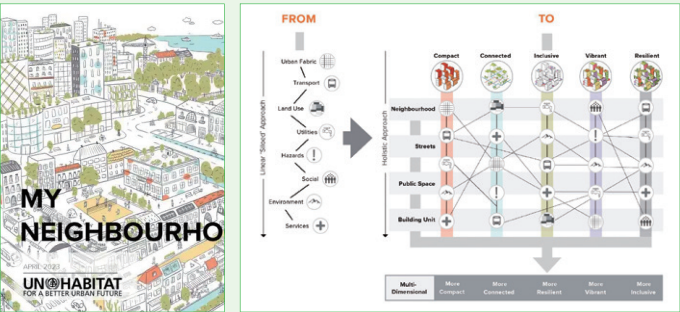
UN 해비타트,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위한
가이드 발간

https://www.archdaily.com/1012961/un-habitat-launches-my-neighborhood-a-practical-guide-for-achieving-sustainable-urban-spaces?ad_campaign=normal-tag
<https://unhabitat.org/my-neighbourhood>

UN 해비타트 도시연구소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위해 도시설계 원칙을 제공하는 가이드 ‘My Neighbourhood’를 발간하였다.

2014년 UN 해비타트가 만든 ‘Sustainable Neighbourhood Planning’의 5대 원칙을 바탕으로 둔 이번 가이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동네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자 계획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해 더 나은 도시환경을 제안한다. 도시설계가를 비롯한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민단체·학계·정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핵심적인 도시계획 이론을 정리하고, 교통·주택·지역도시계획·공공장소 등 동네 규모에 적용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포함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설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도시설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 도시를 크게 소형도시(Compact City), 연결도시(Connected City), 포용도시(Inclusive City), 활기찬 도시(Vibrant City), 회복력 있는 도시(Resilient City) 등 다섯 가지 목표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선형적인 접근 방식 대신 동네와 거리, 열린 공간과 건물 단위의 공간 차원을 연결하는 형태·분포·근접성·다양성·연결성과 같은 다양한 공간 지표를 다룬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장소정체성·포괄성·기후 등 도시와 관련된 연결고리를 강화하며, 도시 디자인의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환경적·이동성 등 도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일련의 원칙을 제공하게 한다.



가이드 ‘MY NEIGHBOURHOOD’
출처: UN 해비타트 홈페이지(<https://unhabitat.org/my-neighbourhood>, 검색일: 2024.2.29.)

일본, 도시녹지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

https://www.mlit.go.jp/report/press/toshi07_hh_000250.html

일본 정부가 도시의 녹지를 보전하고 양적·질적 측면에서 확충하기 위해 도시녹지법, 도시계획법, 도시개발자금 대부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을 일부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환경의 질과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도시녹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의 세 가지 방향을 설명하였다.

국가 주도의 전략적 도시녹지 확보

먼저 도시녹지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도시녹지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우고, 지자체(도도부현)가 광역계획을 책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적 환경의 정비 및 보전의 중요성’을 고려하도록 도시계획법에 명시하였다.

도시녹지의 적극적인 보전·정비 지원

지자체가 재정이나 사업 노하우의 부족으로 녹지 보전과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시녹지의 기능을 재생하고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능유지증진사업(機能維持増進事業)’을 도시녹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특별녹지보전지구(特別緑地保全地区)에서 기능유지증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예산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대항할 수 있는 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녹화지원기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를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시환경의 녹색 정비를 위해 민간투자 유치

ESG 투자 등 환경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의 길이 열려 있으나 여전히 ‘녹지 확보 노력을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렵다’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국가가 이를 평가·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 민간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녹지 확보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를 지침으로 규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조치에 충실했을 때는 이를 인정하여 도시개발 자금 대출 등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출처: shutterstock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주택 개발 시 생물다양성 순이익(BNG) 적용

<https://www.dezeen.com/2023/12/19/biodiversity-net-gain-explained/>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housing-developments-to-deliver-nature-boost-in-landmark-move>
<https://www.gov.uk/guidance/understanding-biodiversity-net-gain>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모든 주택 개발 시 최소 10%의 생물다양성 순이익(BNG)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 순이익(Biodiversity Net Gain: BNG)’은 개발 이전과 비교하여 식물, 동물, 곤충, 박테리아 및 곰팡이 등 특정지역 또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다양성에 대해 측정 가능한 긍정적인 영향(순이익)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은 지난 2021년 환경법(Environment Act)에 이를 포함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번 법안으로 2030년까지 생물종 감소를 중단 시키고자 하는 영국 정부의 목표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개발로 인해 손실되거나 자연 서식지를 조성·개선하는 작업을 통해 얻는 생물다양성 단위를 계산하기 위해 법정 생물다양성 측정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자와 토지관리자 및 지역계획 당국을 위한 단계별 개발 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발 현장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10%의 생물다양성 순이익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외부 단위를 통해 생물다양성 순이익을 달성하거나 정부로부터 법정 생물다양성 크레딧을 구입해야 하며, 정부는 크레딧을 활용하여 영국 내 서식지 조성에 투자하게 된다. 한편 토지소유자는 서식지를 조성 및 개선하고, 목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 30년 동안 해당 서식지를 관리할 법적 책임을 가지며, 이를 위해 등록된 단위의 생물다양성을 생성·강화·유지 및 모니터링하여 생물다양성의 순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사항은 2024년 4월부터 소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2025년 11월 말부터 적용된다.

AIA, 고령자를 고려한 디자인 선정

<https://www.aia.org/about-aia/press/aia-honors-innovative-design-older-adult-living>



Cooperwood Senior Living

출처: <https://cooperwoodseniorliving.com/>

© Paul Vu



Gramercy Senior Housing

출처: <https://kevindalyarchitects.com/projects/details/gramercy-senior-housing/>

© Joshua Simpson



Stonewall House

출처: <https://marveldesigns.com/work/stonewall-house-senior-residences/61>

미국건축가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가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적 디자인 솔루션을 보여준 건축 프로젝트 다섯 건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Aegis Living Lake Union

지역 노인들의 주거지 근처에 들어서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생활지원 주거(assisted living)로 자연스러운 전환을 돕고 있다. 중수도(greywater) 이용 시스템, 태양광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LBC(Living Building Challenge) 인증을 획득하였는데, 노인 생활지원주택이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사용 기준을 수립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Cooperwood Senior Living

건축주의 의지에 따라 커뮤니티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작은 개인실로 채워진 시설 형태가 아닌 제대로 삶을 영위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생활지원주택으로 조성되었다. 개인실과 함께 야외 파티오 공간, 카페, 극장 등 다양한 공공공간을 포함하고 있다. 건축 예산 책정 시부터 중하위 소득 계층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저렴한 이용료로 운영되고 있다.

Gramercy Senior Housing

로스앤젤레스시가 소유한 공공부지에 지원주택기금(supportive housing funds)을 통해 조성된 고령자 주택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노인과 고령 노숙자 등을 수용한다. 북쪽으로 큰 도로인 워싱턴 볼러바드(Washington Boulevard)와 면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높이와 자재를 적절히 활용하여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외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커뮤니티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ose Villa Senior Living 추가 신축 프로젝트

22에이커 규모의 부지에 들어선 Rose Villa Senior Living은 중앙에 배치된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작은 마을처럼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오락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동과 장기 요양을 위한 주거동이 추가되었다. 시설동에는 보육시설과 의료 클리닉, 라운지와 교육용 주방, 거주자들이 운영하는 중고상점 등이 자리하고 있다.

Stonewall House

뉴욕시 주택청(Housing Authority)이 건물 부지를 찾기 어려운 뉴욕 시내에 고령자, 특히 LGBTQ 노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저렴 주택’을 조성한 프로젝트로, 17개 층에 145개 주거실을 갖추고 있다. 1층에 6,800제곱피트의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그 입구가 캔틸레버 캐노피를 통해 시인성 있게 보도와 연결되어 있다. 세탁실 등 편의시설은 2층에 모여 있어 거주민 활동의 중심이 되고, 라운지와 야외 테라스가 이와 연결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2024.1.4.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고 지난 1월 4일 밝혔다.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 도입된 이래 현재 총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지속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을 해소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상반기 중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방안’을 반영하여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등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지정 규모를 총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로 갖추도록 한다.

〈지정기준〉

지정 규모: (기존) 50만 제곱미터 이상 → (신설) 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지정 필수시설: (기존) 3종 이상 → (신설) 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시설) 이상

〈지정·승인권한〉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권자: (기존) 시·도지사(지정 전 문체부 사전협의) → (신설) 시장·군수(지정 전 시·도지사 사전협의)

이을러 소규모 관광단지도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해 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자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방 관광산업 지원 관련 콘텐츠와 세제, 펀드 등 지원방안과 제도적 애로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지역(80개 시·군)

**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외국인 등록지, 재외동포의 국내거소등록지 포함)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다양한 방식으로
인구 늘리기에 나선 지역들

강원도 균형발전과 균형발전정책팀
2024.1.7.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외국인공동체과
2024.2.14.

강원도, 거주·체류 인구 늘리기 위해 3개년 시범사업 추진

강원도가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도내에 거주·체류하는 인구를 늘려 나가기 위하여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특별 지원’과 ‘강원 스테-이 하우스 운영 지원’, 두 개 분야로 추진된다. 먼저 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특별 지원 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해 한 개 지역을 선정, 대상 지역에 새로 유입된 이주민의 정착을 돕고 지역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공동육아 나눔터 및 초동 공동돌봄센터 프로그램 ▲청년 창업·커뮤니티 프로그램 ▲마을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체류형 교육·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원 스테-이 하우스 운영 사업을 통해서도 지역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한 달 살기 등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사무·주거·공용공간과 편의시설을 마련하게 된다. 공모를 통해 매년 2개 시·군을 선정하여 유희공간을 주거·공용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지원한다.

경상북도, 외국인 지역 정착 지원하는 ‘경북글로벌학당’ 개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광역 단위 한국어 교육기관이자 사회 적응을 돕는 ‘경북글로벌학당’이 2월 14일 문을 열었다. 경상북도는 외국인 유학생 등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북도립대학교에서 경북글로벌학당 개소를 알리고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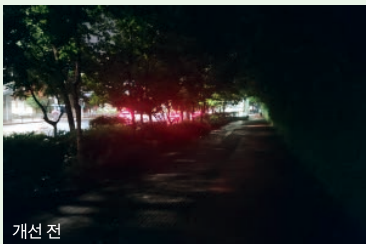
도는 “경북글로벌학당은 전국 최초의 광역 단위 한국어 교육기관”이라면서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일환이자, 외국인이 지역에 스며드는 따뜻한 지방사회를 목표로 한다”라고 학당 설립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경북글로벌학당에서는 27개국 총 680명의 유학생과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유학생 교육 과정(2주간)과 외국인 근로자 교육 과정(1일)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교육은 한국어 토픽, 외국인 정책, 법제도, 생활정보, 문화·산업·경제·정주여건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현장도 방문한다. 또한 향후 교육 과정 확대 및 다변화, 수료자 비자 발급 인센티브, 일자리 매칭 및 사회적응 지원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 정착 지원의 우수모델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위한 경관개선사업 추진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 도로시설과
2024.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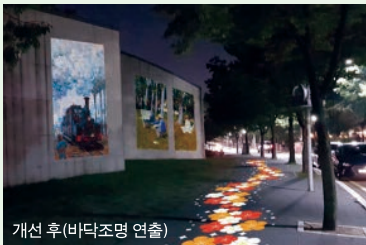
경상남도 도시정책과
2024.1.29.



개선 전



개선 후(FUN 디자인 가로등)



개선 후(바닥조명 연출)

가로등과 경관조명을 융합한
편(FUN) 디자인 콘셉트 가로등
출처: 서울시. (2024). 서울시, 가로등 100% LED로...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경관' 만든다. 1월 22일 보도자료.

서울시, LED 조명 활용한 매력적인 야간경관 조성

서울시는 올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도로조명시설 개선' 작업을 벌인다. 이를 위해 총 2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5년 넘은 노후 가로등과 조명시설을 전면 개량하고, 2025년까지 모든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교통량이 줄어드는 야간에 가로등 밝기를 조절하는 스마트 밝기 제어장치를 설치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자동 제어되는 지능형 점·소등 시스템, 실시간 원격점검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가로등에 CCTV와 무선인터넷 등 각종 시설물을 융합하여 도시정보를 수집하고, 시민 안전을 높이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야간경관에 재미를 주는 편(FUN) 디자인을 적용한다. 이 외에도 한강 교량의 경관조명 개선을 위해 조명시설이 노후한 원효대교와 가양대교의 단색 경관조명을 올해 중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 시내 '야간경관 축'을 고려하여 지역·노선별 가로등의 광원 색온도를 다르게 설치하고 각 지점에 어울리는 색상과 밝기로 조성하는 등 안전뿐 아니라 도시 매력 요소로 다양한 조명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도시경관 조성 위해 경관개선사업 추진

경상남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11억 원을 투입하여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경관개선사업은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사업 ▲간판 개선사업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사업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먼저 노후화된 공공시설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접목하는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사업은 올해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진주·통영·고성 등지에 위치한 공공시설물 3곳의 이용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린 새로운 간판으로 개선하는 간판 개선사업은 45개 업소를 대상으로 65개 간판을 정비하며, 관리자가 없는 간판 철거를 지원하는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을 신설하여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 외에도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창원 '임항선 그린웨이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을 통해 산책로 확·포장과 벽화 조성, 조형물 설치 등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녹색교통수단의 확산 위해 도시공간, 인프라 정비

광주시 도로과 자전거팀
2024.1.30.

서울시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2024.2.15.

광주시, 자전거마을 시범지구 조성 추진

광주시에 녹색교통인 자전거와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자전거마을'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영산강 변 자전거마을 시범지구의 본격적인 조성을 위해 주민설계단을 구성하고, 2월에 시범지구 내 자전거 노선 선정과 기반시설 조성 방안 등을 담아 기본구상(안)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광산구 첨단지구 중심인데, 시는 "이 지역이 산업단지 주변의 주거지역과 근린생활시설, 연구시설 등 업무시설이 밀집한 '전형적인 근린주구' 형태를 띠고 있어 마을 단위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설명하였다. 대상지에는 주민 수요 맞춤형 자전거 노선을 신설하는 등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적재적소에 공공자전거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정착하고, 실천방안을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시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 곳곳과 한강 잇는 자전거 네트워크 조성

서울시가 서울 동쪽의 중랑천, 서쪽 청계천, 북쪽 정릉천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약 1.7킬로미터의 도심 속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통하였다.

먼저 청계천과 정릉천을 직접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교가 조성되었다. 전용교는 길이 30미터에 폭 5.4미터 규모로, 이를 이용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들은 기존 하천 밖 일반도로 우회 시 200미터에 달하던 거리를 30미터로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는 물론 야간시 인성을 높여 주는 태양광 LED 표지, LED 바닥등, 속도 저감 및 횡단보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다.

이 외에도 정릉천~청계천~신답철교에 이르는 485미터의 자전거도로도 신설하고, 신답철교~중랑천 합류부의 노후 자전거도로 1,140미터 구간은 재포장해 도심을 잇는 자전거 네트워크를 완성하였다.

한편 시는 현재 1,336킬로미터의 자전거도로를 2026년까지 동서남북 단절 없이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1,483킬로미터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완공된 청계천·정릉천 구간 보행·자전거 전용교
출처: 서울시. (2024). 정릉천·청계천에서 한강까지 끊김 없는 라이딩... 서울도심 잇는 자전거도로 개통. 2월 15일 보도자료.

장소 탐방

Place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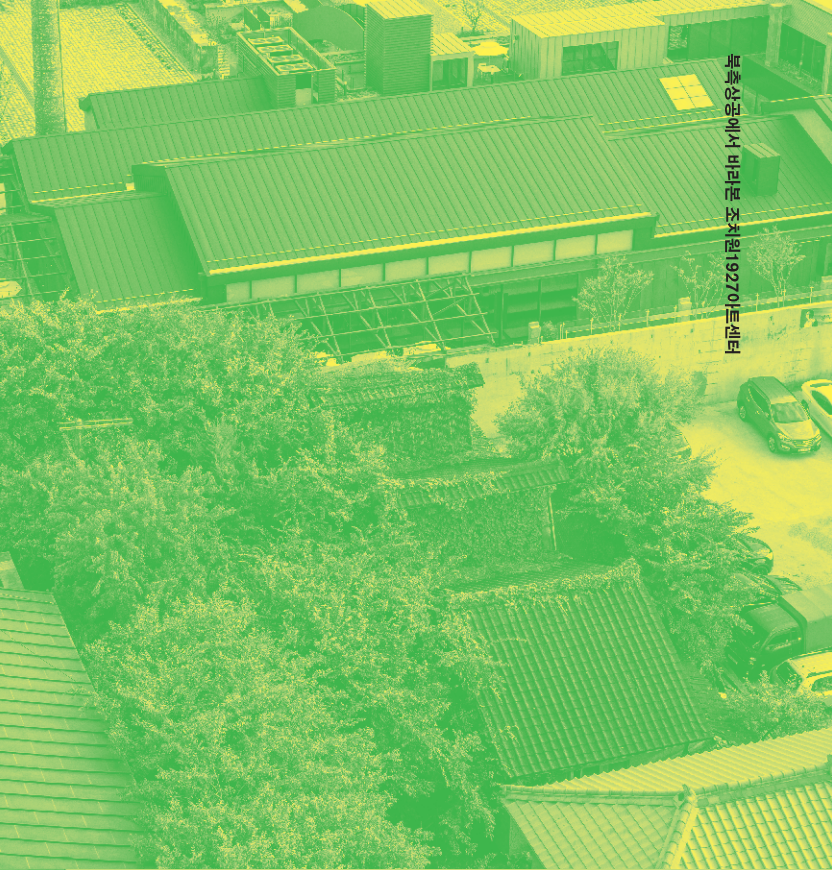
문화재생,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다 - 조치원1927아트센터 | 오래전 쓰임을 다한 폐공장이지만 건물은 철거되지 않았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지은 공장의 건축사적 의미보다는 공장에서 벌어진 치열하였던 삶의 애환에 대한 흔적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용도에 맞는 재생은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 시작되어야 하였다.

도심 소공인 제조업 공간의 혁신 - 성수 사일로: 서울도시제조허브 | 성수동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특정한 이미지와 가치가 인지된 공간, 즉 하나의 장소로서 변화하고 있다. '생산'만 이루어지던 공장 지대에서, 생산은 물론 디자인과 문화의 소비가 함께 이뤄지는 장소로 전이되면서 생동감이 더해지고 있다.

3

조치원1927아트센터는 한때 제사공장으로, 다음으론 제지공장으로 쓰이다 움직임을 멈춘, 폐공장과 그 부지를 되살려 만들어진 곳이다. 공장 굴뚝과 수조를 그대로 보존한 이곳은 공간에 쌓인 이력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감상과 읽을 선물하고 있다.

성수 사일로는 도시 안 새로운 공장의 모델을 제시한다. 생산과 소비의 공간이 입체적으로 엮여 있는 이 건축은 도시 경관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성수동을 걷다 언제든 만나고 그 안에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평택상공에서 바라본 조치원1927아트센터



성수 시일로 전경

2023 한국리모델링건축대전 대상
2023 한국건축문화대상 공공 부문 본상
2023 한국문화공간상 작은문화공간 부문

조치원1927 아트센터

홍경식
(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개요

위치	세종시 조치원을 남리 60-1 일원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변경 전: 공장)
대지면적	6,169m ²
건축면적	1,614m ² (변경 전: 1,061m ²)
연면적	1,703m ² (변경 전: 1,111m ²)
규모	지상 2층
건폐율	26.17%
용적률	27.61%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구조설계	CS구조엔지니어링
설계	(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담당	나오식, 김진묵, 김봉주, 박연인, 엄유빈
시공	(주)장벽종합건설
기계·전기설계	하나기연
설계기간	2021.3.~2021.7.
시공기간	2021.9.~2022.6.
건축주	세종특별자치시

©모노8



북측상공에서 바라본 조치원1927아트센터

지역문화예술을 핵심으로 한 공간재생을 통해 원도심에 성장동력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건축가의 역할은 커로 이루어진 시대의 흔적이 담겨있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이었다. 조치원 역사의 정체성과 지역주민의 애환과 삶을 보여주는
공간의 흔적을 함께 담고자 원형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 김재영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내부



© 김재영



© 김재영

상·하 연결마당



©인근영



©인근영

상 연결브릿지 전경
하 연결브릿지 하부



©인근영



©인근영

상 옛 저수조를 활용한 놀이휴게공간
하·좌 옛 내부수조를 활용해 조성한 휴게공간
하·우 옛 원형수조를 활용한 실내정원

산업유산의 재사용(Adaptive Reuse)을 위한 원형보존은
안전문제와 건축 관련법의 여러 조건과 부딪혔다.
역사적 가치의 변형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전체 맥락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불가피하게 덧대어져 생긴 어색함과 낯센은 여러 켜의 시간이
공존하는 이곳의 매력이 되었다.



©이종우
2019

야간 조명이 켜진 연결마당

한림제지 폐공장 부지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다

일제강점기에 제사공장으로 지어진 건물은 1970년대 제지공장이 되었고, 2000년 초 가동을 멈춘 후에는 방치되었다. 지역경제 발전의 역할을 하던 시설들이 하나둘 멈추면서 조치원 원도심 일대는 과거 번영하였던 전성기를 뒤로하고 기능을 잃은 채 비어 가고 있었다.

오래된 공장은 조치원 근대산업 역사의 흔적을 담고 있어 보존 가치가 있지만 건립기록과 자료가 없었고, 건물의 보존 상태도 좋지 않았다. 오래전 쓰임을 다한 폐공장이지만 건물은 철거되지 않았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지은 공장의 건축사적 의미보다는 공장에서 벌어졌던 치열하였던 삶의 애환에 대한 흔적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용도에 맞는 재생은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 시작되어야 하였다.

공장이 가지고 있던 굴뚝과 수조 등을 상징적인 요소로 보존하고 재사용하였다. 그리고 기존 벽체와 단열이 필요한 신설 벽체를 분리하여 예전의 기억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용도를 담아낼 수 있게 하였다.

상징적인 요소의 활용

공장은 이 지역만의 공간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 지역문화나 도시의 일상이 아닌 색다른 공간을 찾는 도시여행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이곳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공간적 특성을 파악해 문화재생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지역문화예술을 핵심으로 한 공간재생을 통해 원도심에 성장동력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건축가의 역할은 켜로 이루어진 시대의 흔적이 담겨 있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이었다. 조치원 역사의 정체성과 지역주민의 애환과 삶을 보여주는 공간의 흔적을 함께 담고자 원형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주)서울건축종합연구소



구 한림제지 폐공장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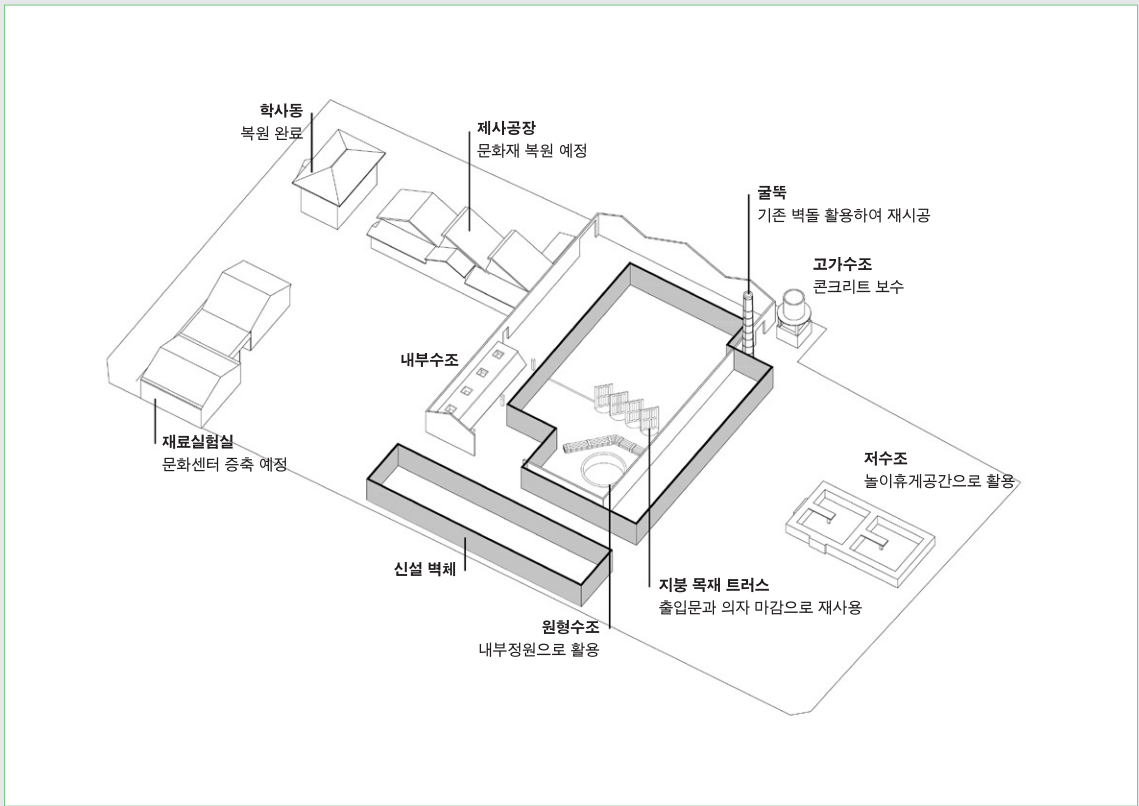


설계 당시 저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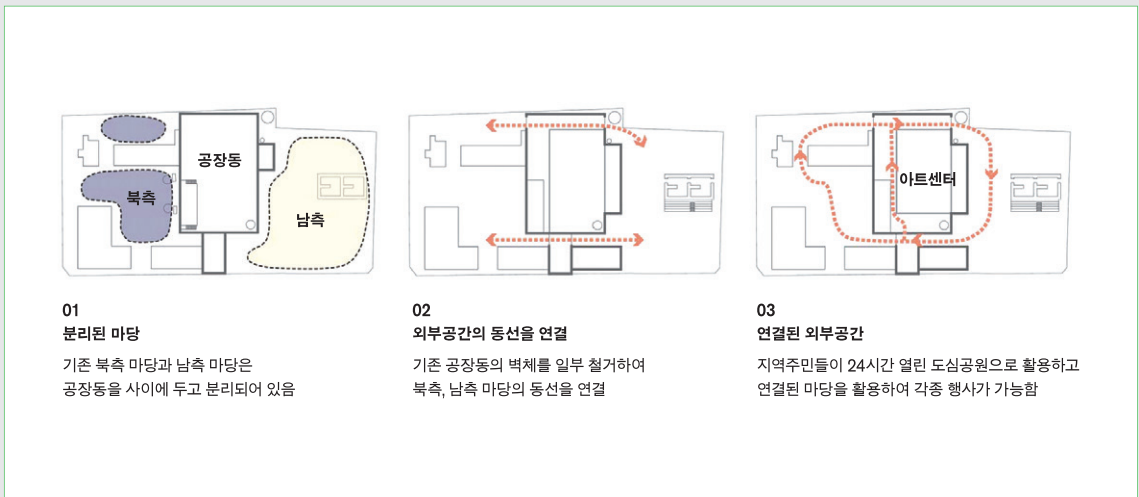
©이종우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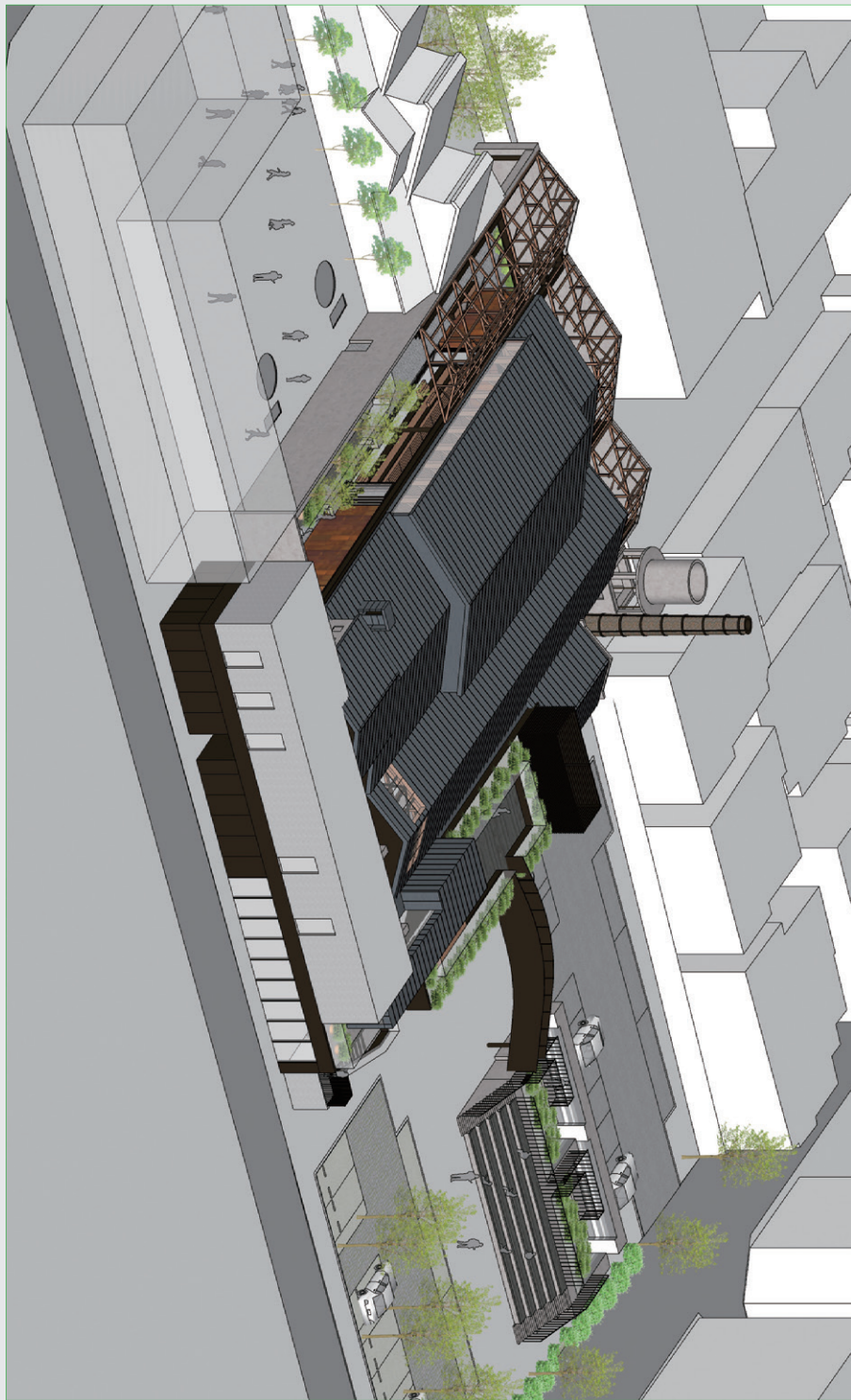
상 남측면에서 바라본 조치원1927아트센터
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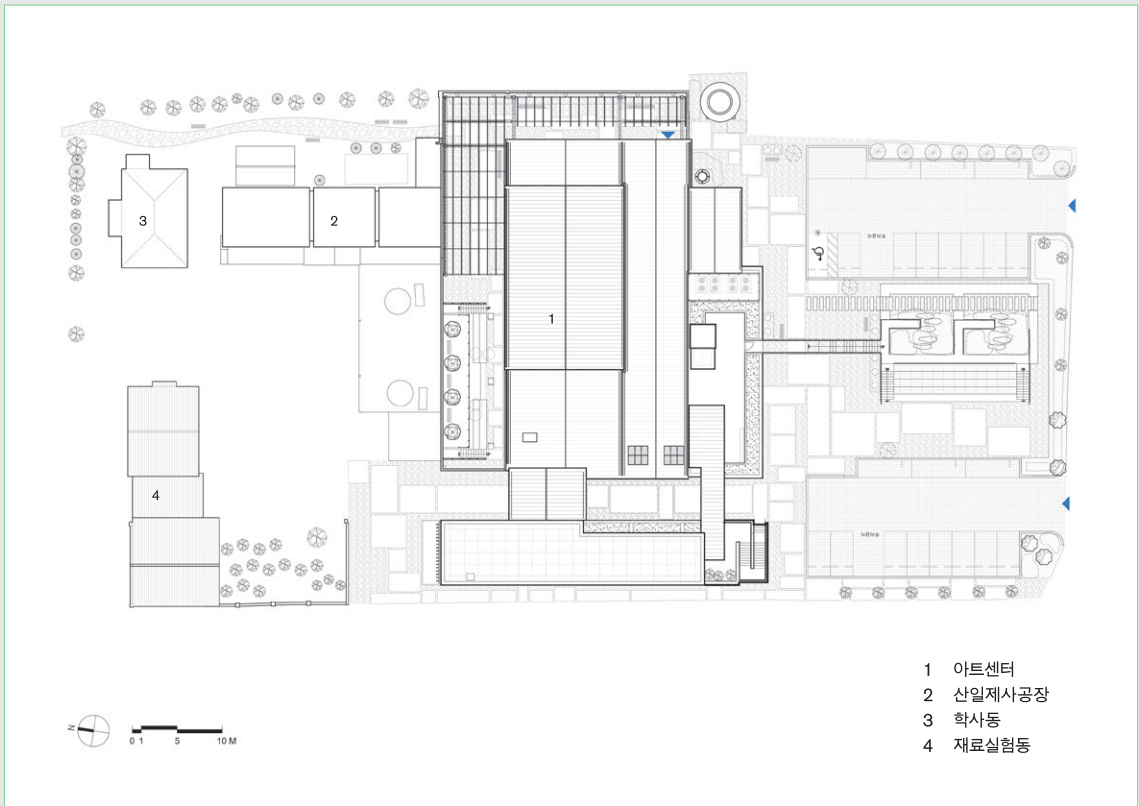


구 한림제지의 상징적인 요소 활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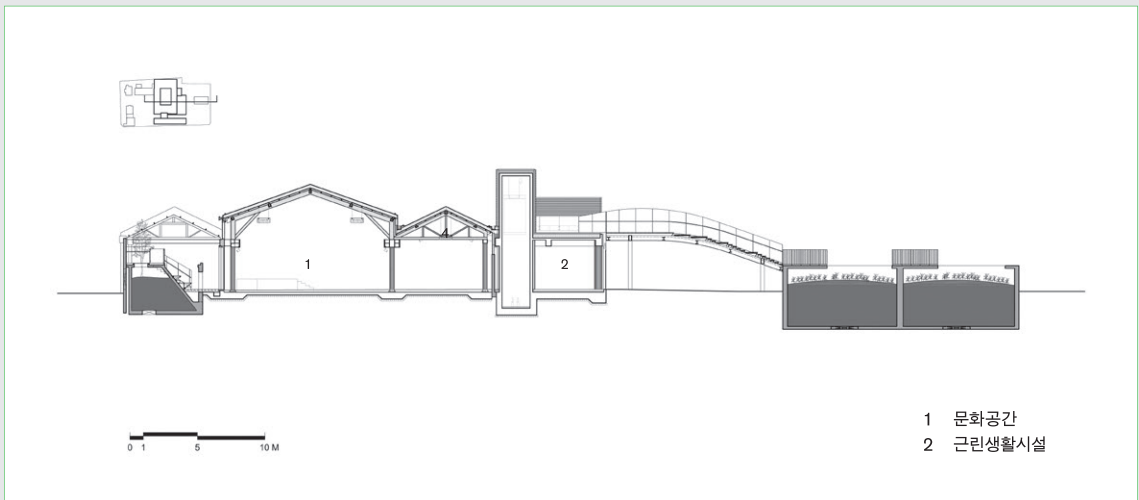


기존 외부공간을 활용한 마당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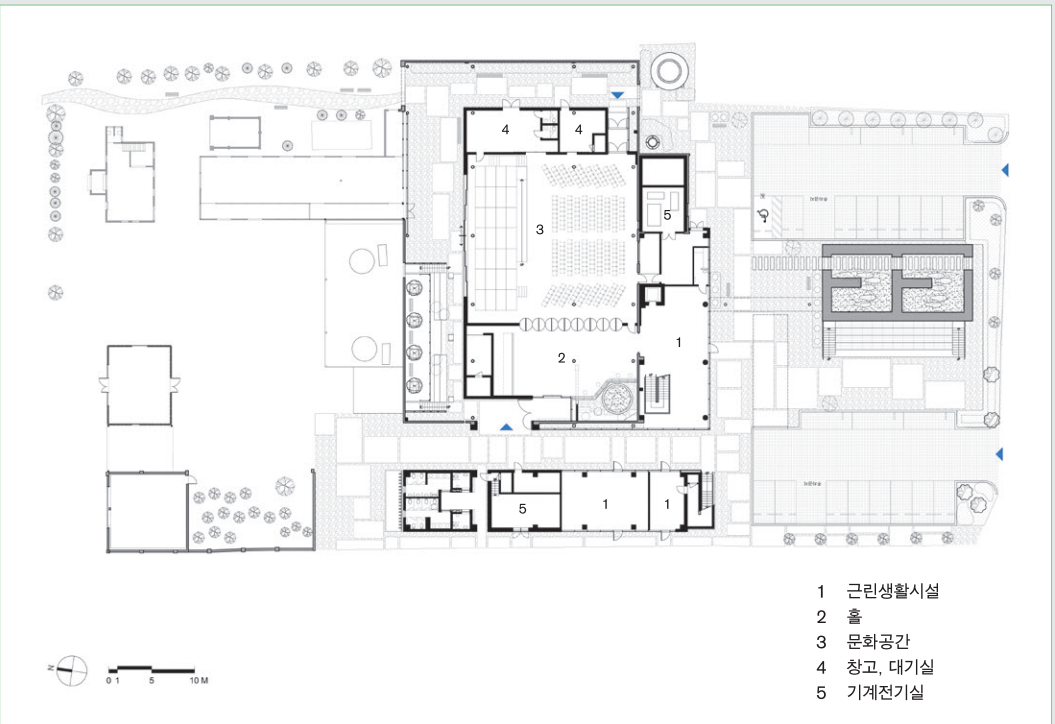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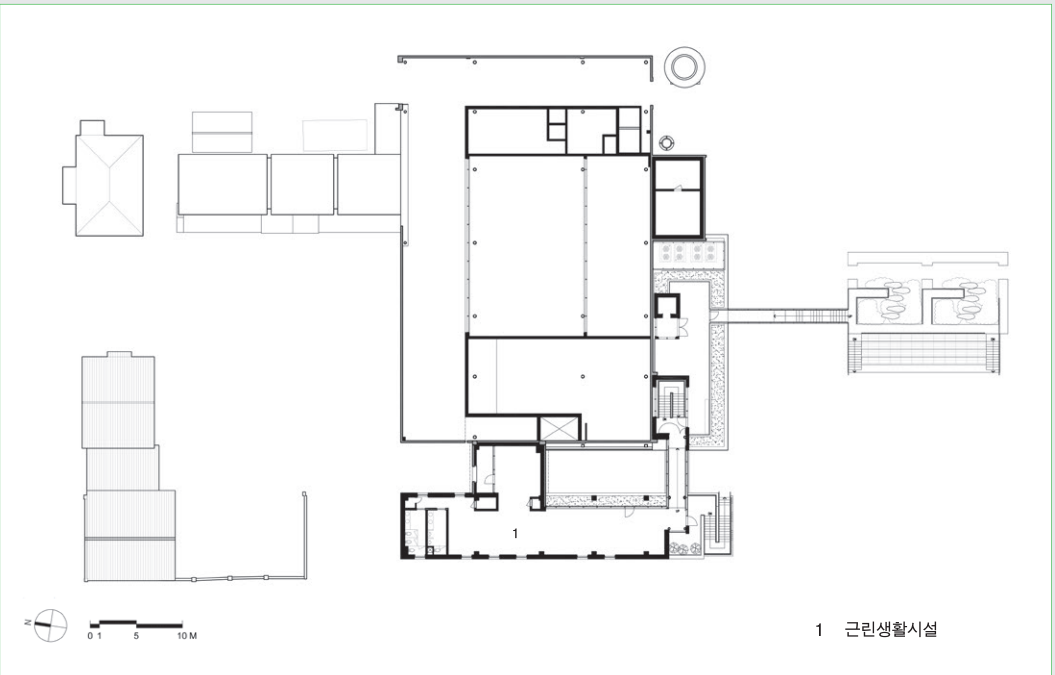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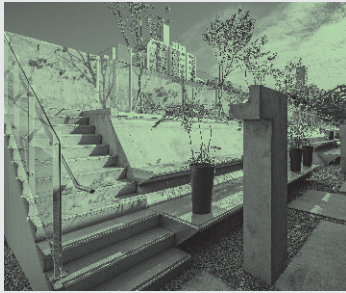
단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김민호



상 옛 내부수조를 활용해 조성한 휴게공간
중 옛 원형수조를 활용한 실내정원
하 옛 저수조를 활용한 놀이휴게공간

기존 벽체와 신설 벽체

기존 벽체를 통해 예전의 기억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용도를 담아낼 수 있게 하였다. 공장건물의 경계였던 요소를 남겨두고 싶었고, 세월의 흔적이 안과 밖에 담겨 있는 모습으로 드러났으면 하였다. 따라서 기존 벽체와 신설 벽체의 레이어를 분리하였고, 단열재는 신설되는 벽체에만 설치하여 기존 벽체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붕 목재 트러스 및 가구

근대산업시설이 지닌 특유의 박공 형태 지붕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획 당시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 철거한 목재 트러스는 재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보관 중이었지만, 적합하지 않은 보관방법으로 인해 구조재로서의 내구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현행법상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부재였다. 따라서 기존 목재 트러스를 재사용하기보다는 현행법에 맞는 구조체를 설치하고 인테리어 요소로서 기존 목재 트러스를 재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천장에 쓰이고 남은 목재는 로비 부분의 의자, 테이블 그리고 출입문 등의 마감재로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해 가는 나무의 색과 질감을 리모델링된 공간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굴뚝

벽돌로 쌓아 올린 기존 굴뚝은 상당히 위태롭게 기울어진 상태였고, 굴뚝을 감싸고 있던 녹슨 철물들이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게 버티고 있는 것 같았다. 공장에서의 쓰임은 다하였지만, 상징적인 요소로서 쓰임은 계속되어야 하였기에 구조물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민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굴뚝의 벽돌을 최대한 손상이 없게 해체하고 현행법상 공작물의 구조기준을 만족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중앙부에 세웠다. 그리고 해체한 벽돌을 다시 쌓아 예전의 굴뚝 모습이 갖추어지도록 하였다.

수조

수조들은 예전 그대로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내부를 물 대신 흙으로 채워 넣었고, 새롭게 태어난 이 공간이 풀과 나무가 자라는 그곳이 되기를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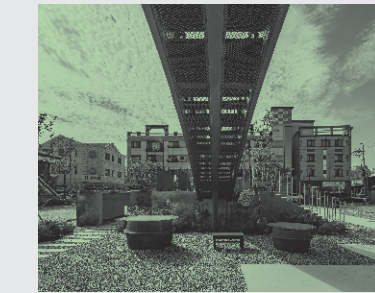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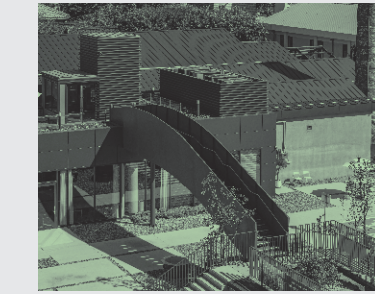
남측 마당의 저수조는 오랜 세월에 걸쳐 생긴 물때가 있는데, 구조체 일부만 철거하여 방문객이 물의 흔적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쪽에는 스탠드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잠시 쉬어가거나 옥외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켠의 시간이 공존하는 재생공간

공장 건물 중 한 채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부지 입구에 있는 관리동(학사관)은 복원을 마친 상태였다. 그중 가장 큰 공장 건물을 공연장과 전시장, 카페 등을 넣은 새로운 용도의 공간으로 변경해야 하였다. 산업유산의 재사용(Adaptive Reuse)을 위한 원형보존은 안전문제와 건축 관련법의 여러 조건과 부딪혔다. 역사적 가치의 변형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전체 맥락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불가피하게 덧대어져 생긴 어색함과 낯설음은 여러 켠의 시간이 공존하는 이곳의 매력이 되었다.

방문객은 큰길 안쪽 주택가에서 우연히 마주치듯 이곳을 찾게 되며, 역사의 기억에 반응하게 된다. 과거 공장 부지의 단절된 외부 공간에서 문화공원을 산책하듯 순회하는 동선의 흐름을 만들고자 폐공장의 벽체를 뚫기도 하고, 새로운 벽체를 만들기도 하였다. 내부공간을 만들기 위해 조심스럽게 세운 벽체들의 구성은 외부공간의 형성에 무게를 더 주고자 하였다. 아울러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양한 마당을 만들어 걷는 문화공간을 제시하였다. 그렇게 연결된 동선을 통해 부지 전체가 도심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 한양의 강북과 신도시의 강남으로 나뉜 서울에서 역사가 공존하는 도심재생공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역사와 문화를 두텁게 만드는 지역문화재생은 세종시 원도심과 신도심이 안고 있는 불균형의 간극을 줄이고, 문화적 욕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이 건축과 공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활기는 문화재생의 영감을 자극할 것이다.



상 연결마당
중 연결브릿지 전경
하 연결브릿지 하부

성수 사일로: 서울도시제조허브

강예린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치훈

건축사사무소 에스오에이 소장

개요

위치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7-34
용도	공장, 업무시설
대지면적	559m ²
건축면적	335.25m ²
연면적	2,179.97m ²
규모	지상 7층, 지하 2층
높이	27.95m
주차	16대
건폐율	59.97%
용적률	389.9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마감	치장벽돌, 아연도금강판, 노출콘크리트, 커튼월
내부마감	치장벽돌, 노출콘크리트
구조설계	베이스구조기술사사무소
설계	강예린, 이치훈
설계담당	정유리, 이정연, 이윤석, 김정민, 김윤지
시공	세이브건설
기계설계	주성이엔지
전기설계	한길엔지니어링
조경	얼라이브어스
설계기간	2019.5.~2020.2.
시공기간	2020.6.~2023.4.
공사비	62억 원
건축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성수 사일로 전경

기존 도심형 공장이 효율적인 생산만 강조하는 것에 비해, 성수 사일로는 제작·기획·유통·마케팅·소비가 하나의 공간에서 통합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는 최근 창업 공간 트렌드를 반영하여, 생산공간의 혁신을 꾀하고자 한다. 새로운 공장은 소비의 공간과 생산의 공간이 입체적으로 엮어짐으로써, 상품 체인의 지리를 압축해놓은 공간이 된다. 성수 사일로는 새로운 타입의 공장으로 소공인을 위한 공간 브랜딩을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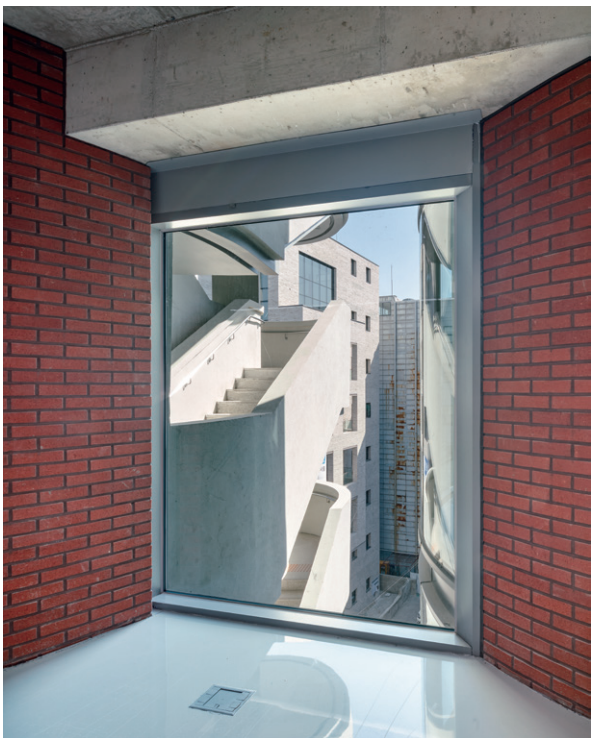


©시경

1층 전시 및 다목적 공간



©시경



©시경

상 1층 진입홀
하 주요 부재로 사용된 벽돌과 유리



©인경서



©인경서

상 다목적 프로젝트 룸
하 소비 공간과 생산 공간 사이 복도



©인경서

워크웨이

이는 평평하고 넓은 영역으로 연결된 가로로 인해, 보행상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한 문화 시설들이 보행 네트워크에 접합할 수 있는 건기 좋은 도시 성수동의 환경에 기인한다. 성수 사일로로는 도시와 만나는 저층부 파사드에, '제작'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을 전면적이고 입체적으로 배치한다. 날로 촘촘해지는 성수동의 보행 네트워크상에서, 다시 오고 싶은 경험을 선사하는 '도시-건축'이 되고자 한다.



© 건축

생산과 소비, 제조와 유통이 입체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공장

도시 속 새로운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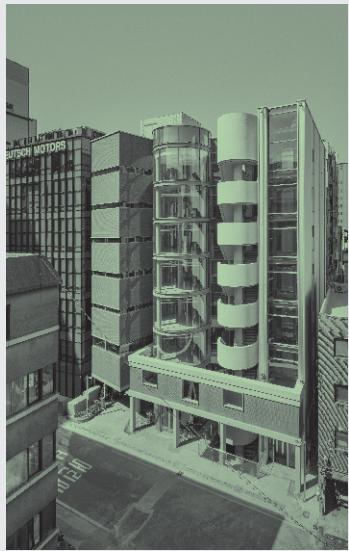
성수동 수제화 산업 구조는 소공인들이 직접 브랜드를 만들지 못하고, 본청에서 주문한 상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의 종속성을 갖고 있다. 기존 도심형 공장이 효율적인 생산만 강조하는 것에 비해 성수 사일로, 서울도시제조허브는 제작·기획·유통·마케팅·소비가 하나의 공간에서 통합적인 과정으로 진행되는 최근 창업 공간 트렌드를 반영하여 생산공간의 혁신을 꾀하고자 한다. 새로운 공장(new type of factory tower)은 소비(기획, 디자인, 마케팅, 소비자)의 공간과 생산의 공간이 입체적으로 엮어짐으로써 상품 체인의 지리(geography of commodity chain)를 압축해 놓은 공간이 된다. 성수 사일로는 새로운 타입의 공장으로서 소공인을 위한 공간 브랜딩(spatial branding)을 제안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가 입체적으로 엮인 제조업 공간

배치의 핵심은 기획, 유통, 마케팅, 네트워크 등 제조업의 브랜딩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의 활발한 상호 개입이 일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면 도로에 배치하는 것이다. 새로운 공장으로서 담아야 할 프로그램의 공간 요소를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도록 하기 위해 전면의 독립된 볼륨으로 강조한다. 메이커스 칼럼과 슈즈 사일로, 워크웨이 & 리프트로 이름 지어진 서비스 공간은 전면 도로에 대해 건물의 입면을 휴면 스케일로 분절하고 보행자를 건물 내부로 유입한다. 전시 공간, 팝업 매장, 회의실, 강의실 등 소공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또한 전면에 배치하여 소공인과 소비자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일어난다. 반면 소공인의 제조 및 업무 공간은 건물의 후면에 위치한다. 전면의 서비스 공간과 후면의 제조 및 업무 공간 사이에는 공용 공간을 둬으로써 서비스 공간을 외부에 독립적으로 열 수 있게 한다. 공용 공간에는 외부의 치장벽돌이 실내 재료로 관입하면서 공공 영역의 성격을 강화한다.

후면의 제조 및 업무 공간은 유니버설 평면으로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업무 공간 안쪽에 위치한 발코니와 양 측면 커튼월 구조의 외벽은 쾌적한 업무 공간을 만들어 낸다. 업무 공간 안쪽 벽은 작업대와 선반 등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철근콘크리트조 벽량을 확보하였다. 서비스 공간과 분리된 연속적 평면 구성으로 인해 제조 및 업무 공간의 레이아웃은 쉽사리 조절 가능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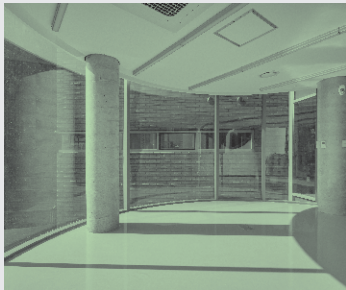
© 건축



상 성수 사일로 전경
하 보행자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서비스 공간



© 신정현



상 1층 전시 및 다목적 공간
중 소비 공간과 생산 공간 사이 복도
하 다목적 프로젝트 룸

좌우로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다. 복도만 가로막거나 필요 면적만큼 파티션의 위치를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 및 입주 소공인의 성장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유기적으로 변형되고 반응한다. 후면 테라스로 나가는 문도 테라스별로 두 곳이 있어 평면 레이아웃의 가변성을 돕는다. 이렇듯 기획·유통·마케팅·소비 공간·교류 공간·생산·업무 공간으로 구성된 평면은 제조업의 '원스톱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전면 도로와 평행하게 서비스 및 지원 공간, 공용 공간, 제조 및 업무 공간의 각 프로그램 영역이 나란하게 놓임으로써 추후 건축물 확장의 필요에도 유연한 평면 구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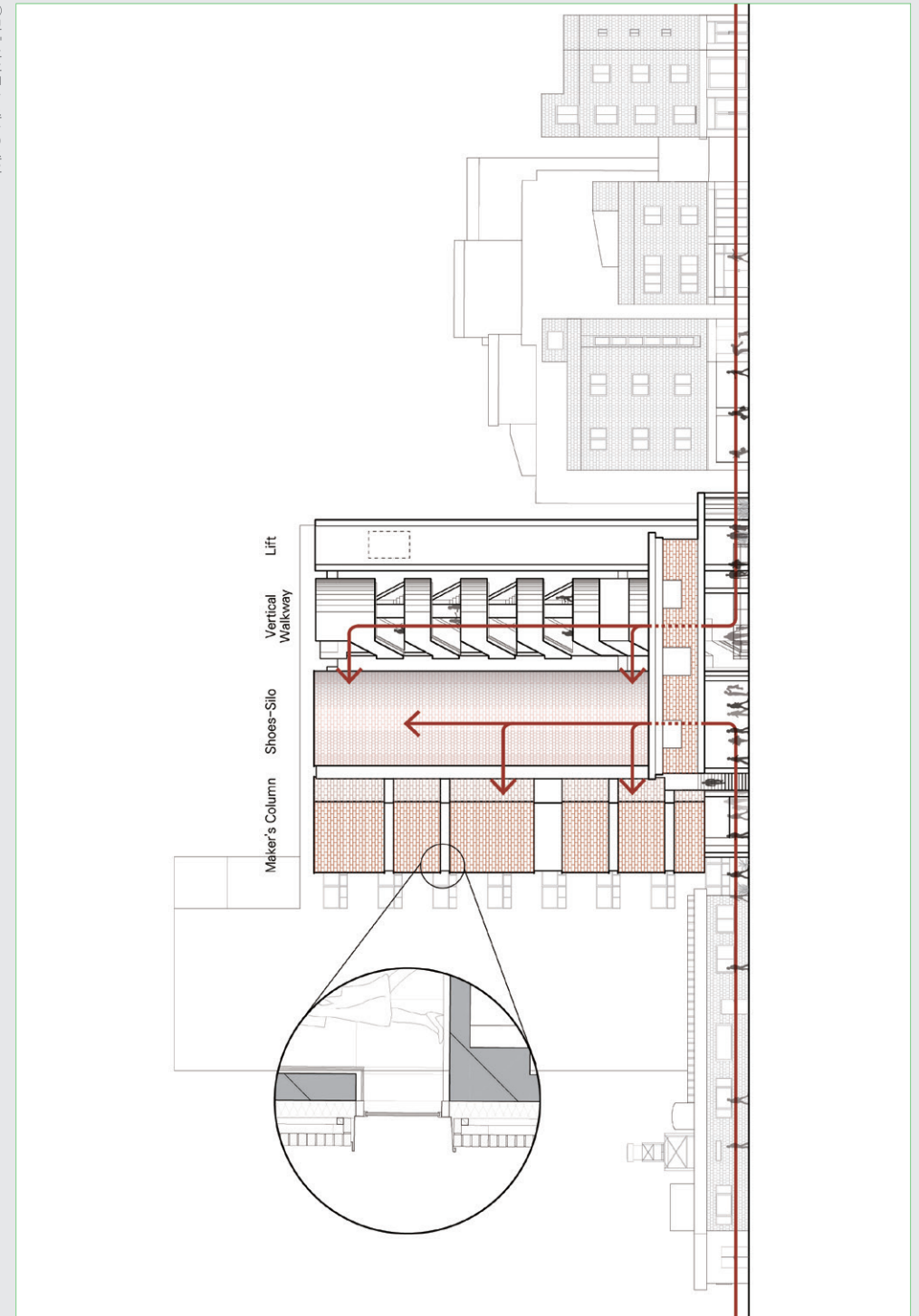
도시 경관의 연속, 열린 저층부, 심리적 경계

용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만으로 축조된 공장 건물은 나뭇의 산업적 미감을 지닌다. 성수동 거리의 재료 팔레트는 실용성과 경제성을 기반으로 한 공통의 건축 언어로 채워져 있다. 대상지의 기존 공장은 콘크리트 골조 사이를 벽돌로 채워서 만든 라멘조 건물로, 성수동의 전형적인 건축 유형이다. 성수 사일로로는 가로 경관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친숙한 재료를 사용하되, 쓰임을 달리해 장소성을 존중하고 발전시키려고 한다. 먼저 기존 건물의 내부 공간이 아닌 전면의 입면 일부를 보존함으로써 성수동의 공장지대 거리에서 느껴졌던 풍경의 연속성을 잇는다. 보존된 2층 입면과 기둥은 새로운 공장의 기능을 담은 사일로들을 울타리처럼 감싸 안아 서비스 영역을 독립적으로 정의하는 한편 개방된 포디움의 조건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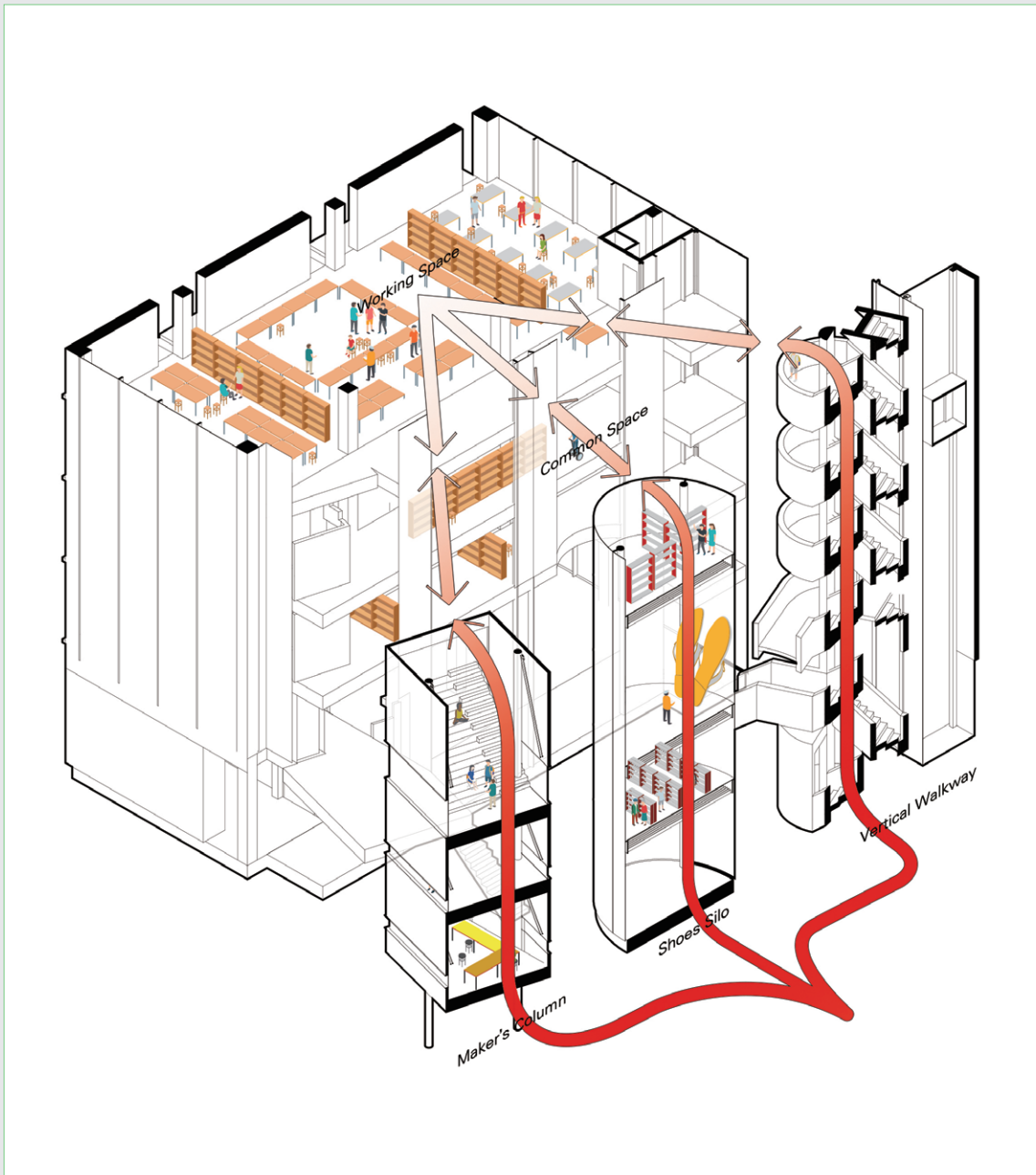
보행자는 기존 건물의 남겨진 기둥 사이로 건물에 진입하게 되며, 지상 1층과 지하 1층의 전시 및 다목적 공간으로 바로 연결되거나 계단을 통해 2층의 서비스 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다. 외부와 내부에 같은 바다 재료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유연한 다목적 공간을 위해 무빙월로 공간을 구획한다.

슈즈 사일로의 1, 2층은 외부와 직접 연계된 공간이자 진입홀로서 방문객을 맞이하는 역할을 한다. 2층의 공용 공간과 복도는 메자닌 역할을 하며 1층과 수직적으로 연계된다. 이로써 외부 기획자와 소비자들이 건물의 저층부뿐만 아니라 상층부의 서비스 공간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건물로 진입하는 심리적 경계를 낮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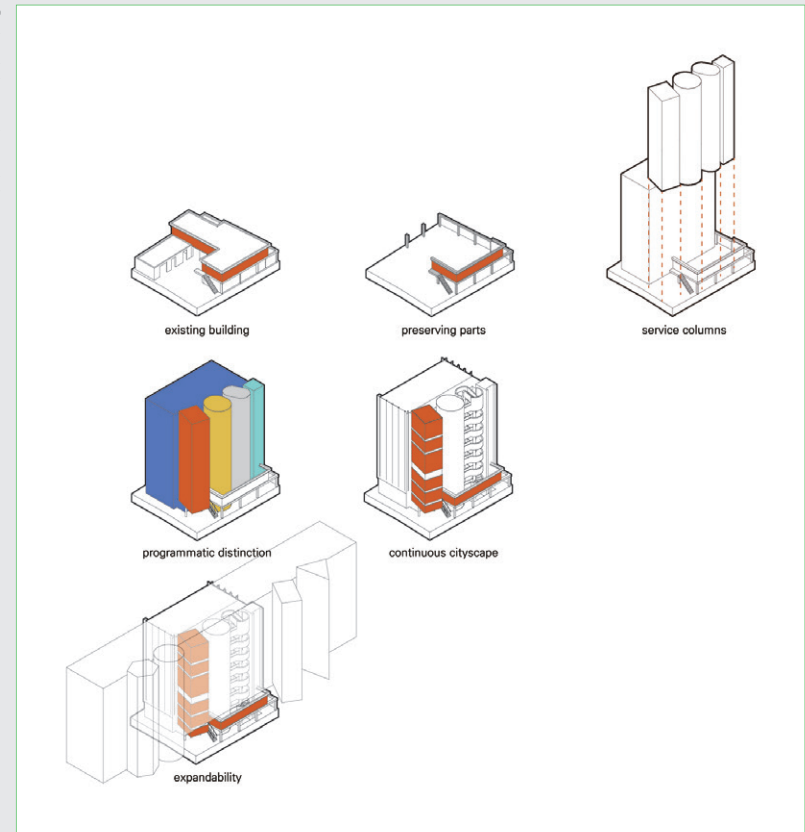
© 건축사사무소 에스오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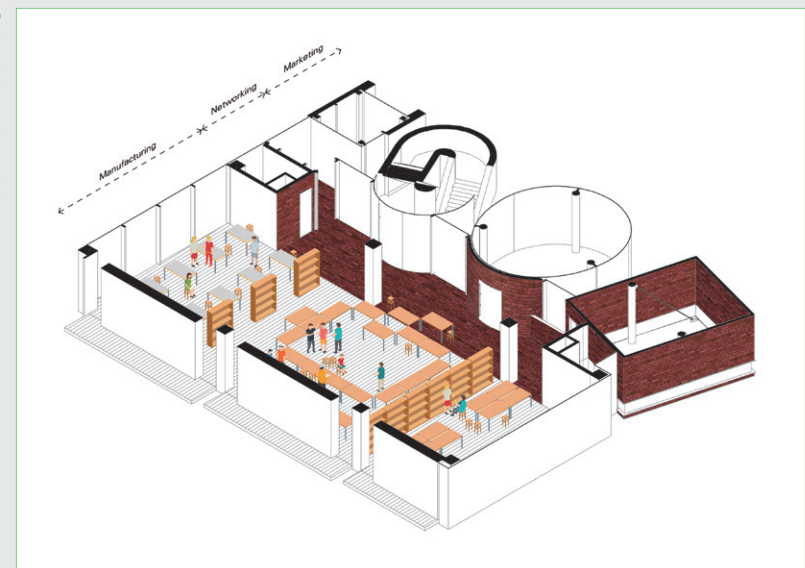
입면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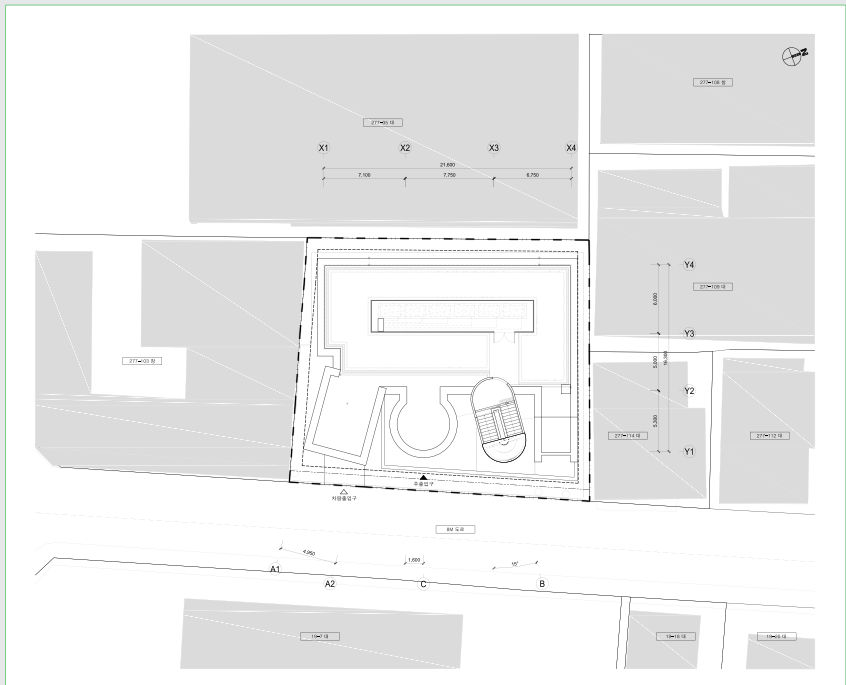
아이소메트릭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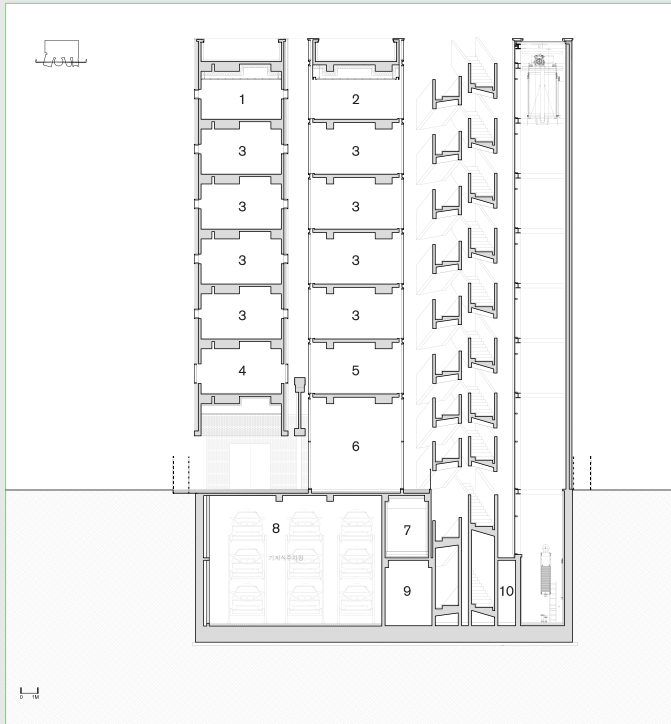
매스 다이어그램



자재 사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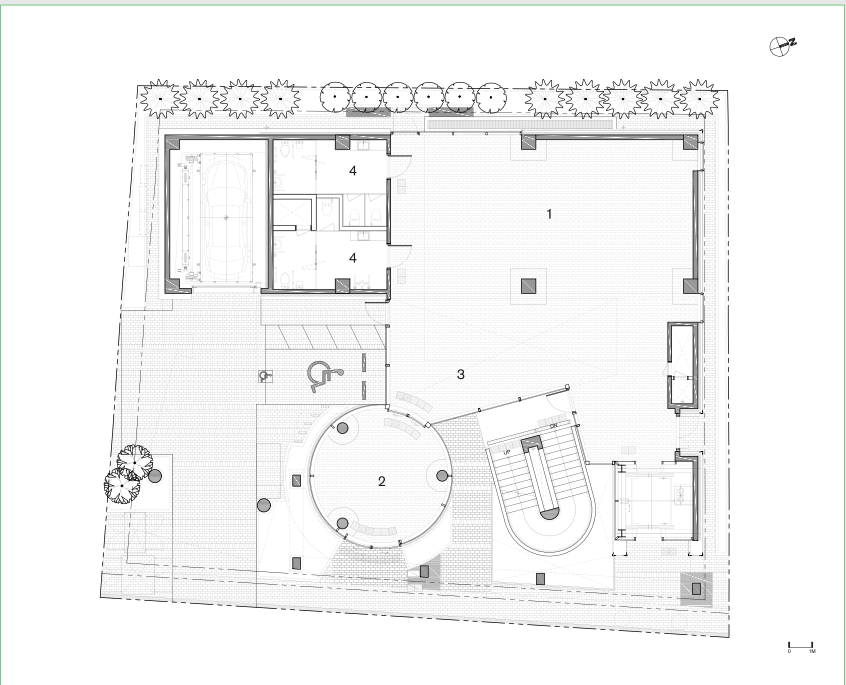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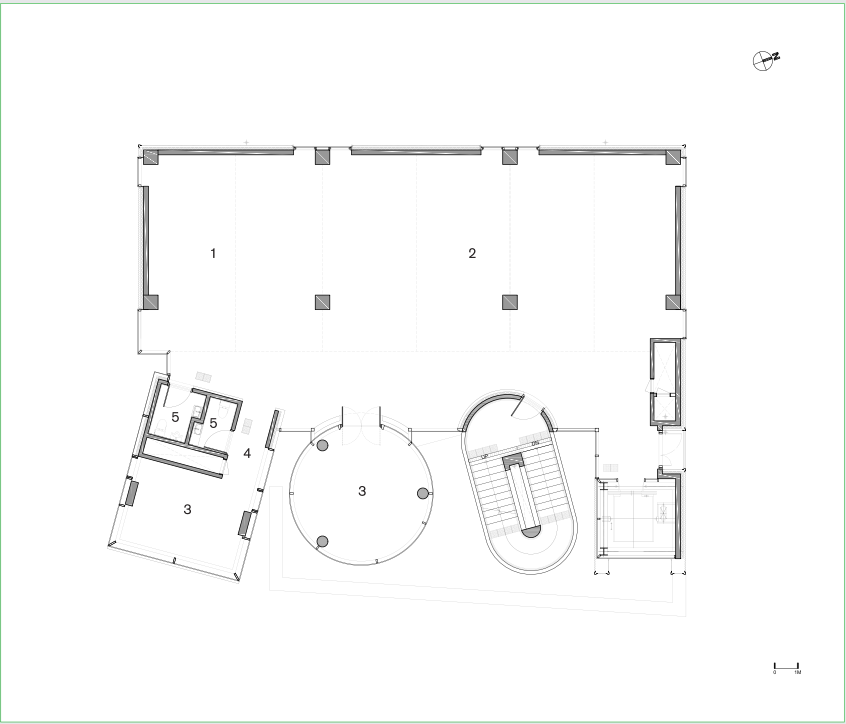


횡단면도

- 1 탕비실
- 2 소회의실
- 3 다목적 프로젝트 룸
- 4 휴게공간
- 5 전시실
- 6 방풍실
- 7 방재실
- 8 기계식 주차장
- 9 소화수조
- 10 복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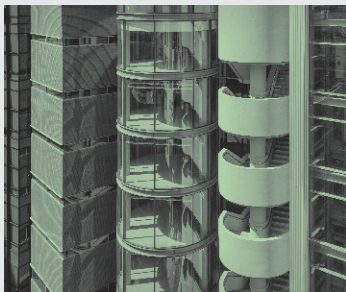
3층 평면도

- 1 다목적실(VR/AR 체험 및 판매)
- 2 방풍실
- 3 로비
- 4 화장실

- 1 초기 소공인 입주공간
- 2 스마트 팩토리
- 3 다목적 프로젝트 룸
- 4 복도
- 5 화장실



©김경자



상 워크웨이
하 생산과 소비, 제조와 유통이
입체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공장

슈즈 사일로는 전면을 유리로, 후면을 벽돌로 계획하여 시각적으로
열리면서도 독립적인 공간으로 인지된다. 워크웨이 & 리프트는 성
수동 풍경에서 발견되는 외부 계단의 어휘를 차용한 동시에, 도로가
수직적으로 연속되듯이 느끼도록 한다. 한편 기존 건물에서 벽보가
외부에 드러나며 형성하였던 입면의 콘크리트 수평 띠는 바닥에서
약 600밀리미터 높이의 수평 창호로 해석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
들의 걸음과 신발을 강조한다.

성수동 보행 경험의 확장

성수동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특정한 이미지와 가치가 인지된 공간,
즉 하나의 장소로서 변화하고 있다. ‘생산’만 이루어지던 공장 지대
에서, 생산은 물론 디자인과 문화의 소비가 함께 이뤄지는 장소로
전이되면서 생동감이 더해지고 있다. 가치 있는 장소는 사람들을 모
으고, 새로운 도시의 경험을 만들어 낸다. 원재료, 중간 제품, 완제품
들이 주로 오가는 물류 기반 시설이던 도로는 성수동이라는 장소를
소비하는 이들의 보행으로 점차 점유되고 있다. 이것은 수제화의 제
작 공정에 소비자가 개입할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풍경
이다. 이는 평평하고 넓은 영역으로 연결된 가로로 인해, 보행상 비
교적 먼 거리에 위치한 문화시설들이 보행 네트워크에 접합할 수 있
는 ‘걷기 좋은 도시 성수동’의 환경에 기인한다. 성수 사일로는 도시
와 만나는 저층부 파사드에 ‘제작’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서비
스 영역을 전면적이고 입체적으로 배치한다. 날로 촘촘해지는 성수
동의 보행 네트워크상에서, 다시 오고 싶은 경험을 선사하는 ‘도시-
건축’이 되고자 한다.

auri 소식

건축과 도시공간

Vol. 53
Spring 2024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100

포럼 및 세미나
108

연구원 단신
111

건축공간연구원의 신규 과제를 소개하고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지역맞춤형 건축정책을 위한 건축물 연령 지표 개발	송유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모델 개선방안 연구	임보영
	노후계획도시의 탄소중립도시로 전환을 위한 건축물 생애주기별 탄소배출저감 방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활용 연구	김성준
	건축물 안전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진흥 방안	현태환
	이재민 생활안전과 지역사회 회복력 제고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방안 연구	박유나
	건축물 설계과정의 안전성 검토·평가제도 현황 진단 및 합리화 방안 연구	이화영
	인구감소도시의 콤팩트-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생활권계획 활용방안	변은주
	임대형기숙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연구	유제연
	공간특성을 고려한 지역상권의 공간관리 방안 연구	정인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배선헤
연구 과제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도시설계 제도 개선 연구	이혜원
	현대 정원도시의 다원적 기능 구현을 위한 계획방향 연구	김용국
	유산영향평가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공간관리 정책방안 연구	손은신
	탄소중립사회 달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정보체계 개발방향 연구	허한결

기본과제

① 지역맞춤형 건축정책을 위한 건축물 연령 지표 개발

건축물의 분포 현황과 성능 등에 대한 정보는 지역의 정책과 사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시 후속 조치로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축물의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왔으며, 고성능 재료 사용, 신공법 개발 등으로 신축 건축물의 안전성은 점차 강화되었다. 반면에 연식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설 당시의 낮은 안전기준, 재료의 부식 등으로 인하여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할 수 있으며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 범위가 클 가능성이 높다.

현재 건축물의 노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부처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는 동수, 단위면적, 비율과 같이 단편적인 수치 또는 대용량의 원시데이터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즉각적인 파악과 해석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특정 시점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 건축물 현황에 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책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직관적으로 중장기적인 대상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맞춤형 건축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의 건축물 노후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건축물 연령 피라미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유형화하는 등 지역맞춤형 정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발된 지표는 정책사업 대상지 선정, 예산 배분 등에 있어 건축물의 노후화 현황과 함께 진행 추이 예측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고자 한다.

송유미

②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모델 개선방안 연구

최근 우리나라 전체 범죄 건수는 2021년 대비 2022년에 소폭 증가하였으며(1,531,705건→1,575,007건), 강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에 대폭 증가(35,126건→43,927건)하였다. 202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사회불안 요인 중 ‘범죄로 인한 불안감’이 신중 질병, 국가 안보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범죄 발생과 범죄 두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게다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 선정되면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예산과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사업 방식과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발달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고, 이를 건축·도시 환경에 적용하는 사업 방식이 주를 이뤄왔고, CCTV 설치, 경관 개선 중심의 사업 양산, 사업 종료 이후 유지 관리 및 성과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범죄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고, 공·폐가와 노후 공공시설이 증가하는 등 지역의 물리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한 범죄예방 사업 방안들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본격화된 지 약 2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관련 법, 제도, 사업들의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그 흐름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의 사회환경 변화는 지역의 범죄 발생 건수와 범죄 두려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기에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사업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임보영

③ 노후계획도시의 탄소중립도시로 전환을 위한 건축물 생애주기별 탄소배출저감 방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활용 연구

정부는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등을 통한 노후계획도시 등의 대대적인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1기 신도시의 경우 10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철거와 재건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뿐 아니라 개발 이후 운영 단계에서 에너지사용량 또한 기존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성’, ‘탄소중립’을 고려하여 노후된 주택들을 재건축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배출저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실현 수단으로써 국가 정책 측면의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노후 계획도시들과 같이 특별법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대규모 재정비,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건축물 또는 단지별로 생애주기인 해체·건설·운영 단계별로 민간의 탄소배출저감, 제로에너지 달성을 유도하기 위한 핀셋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이는 강제적인 사항과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 사항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별법 내 관련 법령 조항 신설 및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그리고 기본계획 추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그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노후계획도시들의 재건축을 가정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별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수요량을 정량적으로 산정·검증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재건축 단계별로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 방안 및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한다. 향후 이 연구가 민간 주도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탄소중립도시’라는 공공의 목표 달성을 위한 건축·도시 분야의 정책적·제도적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준

④ 건축물 안전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진흥 방안

건축물의 안전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해 국가정책은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점검 제도의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을 통해 안전점검 및 관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에 따른 신축건축물 물량의 감소 및 기술발전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건축물 시장의 패러다임이 기존 신축 시장에서 유지관리 시장으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축물의 유지·보수 시장 전망을 2030년에는 14조 7,23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향후 노후 건축물의 지속적 확대, 인구 감소로 인한 신축 건축물 시장의 축소, 기존 건축물의 사용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유지관리 산업의 확산,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 제도 및 정책의 추진 등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관련된 산업을 규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체계적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업 신설 및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의 정의 및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 및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 발전 전략에 따른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유지 및 관리업무가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국민의 일상안전이 확보되고, 건축물의 사용성 증진을 통해 건축물 거주자 및 사용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현태환

⑤ 이재민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회복력 제고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방안 연구

포항지진, 강원도 동해안 산불, 역대급 폭우 등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 주택 및 이재민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이전과는 다른 형태나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복구기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이재민들의 임시주거시설 거주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재난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단숨에 앗아가기 때문에 재난 피해자들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임시주거시설은 이재민의 일상 활동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재민들의 거주성이 고려되지 않은 임시주거시설에서의 장기거주는 재난 PTSD 회복 저하, 질병 유발 등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국내의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기존 지침은 신속한 공급, 응급구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재민들의 임시주거시설 장기거주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시주거시설은 제공되는 시설의 목적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난 발생 이후 피해규모, 이재민 특성 등을 반영한 적합한 주거공간 제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 임시주거시설 지원은 단기구조 및 대응에 적합하므로 이재민들의 기존 생활, 해당 지역의 특성 등에 따른 이재민의 거주성을 고려한 중장기 임시주거시설의 요건과 주거 측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이재민 생활안정 제고를 위해 필요한 거주요건 및 가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임시주거시설 지원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임시주거시설 계획 및 지원 패러다임이 수용중심에서 거주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 및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유나

⑥ 건축물 설계과정의 안전성 검토·평가제도
현황 진단 및 합리화 방안 연구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건축물 구조안전사고의 발생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2014년 전후로 발생한 건축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를 기점으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와 구조안전 심의 제도화, 지하안전평가 제도 신설 등 건축 설계과정의 구조안전성 검증 체계가 고도화되어 왔다.

그러나 국내 건축물 안전정책이 사건사고 수습과 그 원인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급속히 추진되면서 관련 법령 간 관계 설정, 제도 간 역할 및 절차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그 결과로서 일부 평가제도의 경우 건축물 안전 관련 검토·평가제도 및 대상의 확대 과정에서 일부 유사·중복적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의 경우 지반안전 측면에서 검토항목의 내용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면서 양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선행 평가·검토 내용이 후행 심의단계에서 변경되거나 주관적인 심의의견으로 인한 예측 가능성 저하, 업무 적체로 인한 설계기간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는 국민의 안전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복잡다단한 절차로 인한 규제자와 피규제자 양측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적용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합리화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건축물 설계과정에서 구조안전과 관련한 검토·평가제도의 운영 실태와 실제 참여주체 의견 수렴을 토대로 운영 및 절차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가·심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중복·불합리한 절차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화영

⑦ 인구감소도시의 콤팩트-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생활권계획 활용방안

도시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성장과 개발 중심의 기존 접근법에서 벗어나 축소와 쇠퇴,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술 진보 등 다양한 현대 도시의 문제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공간 수요에 부합하는 도시계획 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생활권계획을 도시계획체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그간 생활권계획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비법정 방식으로 도입·운영된 바 있으나,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도시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구감소도시들은 빈집 증가, 도심 밀도 저하, 기반시설 유지·관리의 비효율성과 같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공간의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구감소에 직면한 도시의 공간적 대응 전략으로 '컴팩트-네트워크'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적용·실현하기 위한 생활권계획의 활용 방안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2022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 곳을 대상으로 공간구조적 차원에서 콤팩트-네트워크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이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요소와 방법론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신규 도시계획체계의 본격적 운영에 앞서 새로운 제도가 마주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함으로써 신규 도시계획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권계획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은주

⑧ 임대형기숙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연구

1인가구 증가, 공유경제 확산 등 경제·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2010년대 이후 부엌, 거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및 대도시 등 주거비용이 높은 지역에서 1인가구를 중심으로 공유주거가 확산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가진 접근성, 공간의 개성, 편리성, 임대가격 등의 단점을 종합적으로 보완하는 대안으로 여겨졌다.

2023년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공유주거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임대형기숙사’라는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고, 임대형기숙사의 개인공간 및 공유공간 면적 등을 규정하는 ‘기숙사 건축기준’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임대형기숙사의 면적기준은 기존 다중생활시설과 유사한 수준이다. 동시에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상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하위용도로 분류되어 용도지역, 부설주차장 설치 등의 규제가 다른 유사 건축물 용도에 비해 매우 완화되어 있으며, 더불어 규모 상한과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의 미흡함으로 인해 관련 전문가들은 도입 취지에 반하는 저품질의 편법적 임대형기숙사가 난립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자체 또한 같은 이유로 임대형기숙사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임대형기숙사의 건축물 용도 신설에 따른 건축 및 운영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임대형기숙사의 건축물 용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고,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옴으로써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유제연

⑨ 공간특성을 고려한 지역상권의
공간관리 방안 연구

상권은 민간의 경제활동이 집적된 공간으로 지역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며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익적 효과가 있으며 공공재 성격을 가진다. 지역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는 경제적 장소이자 일상의 대면활동과 문화향유 경험을 제공하는 사회적 장소로서, 상권의 쇠락은 지역 전체의 활력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현안이다. 한편, 최근의 상권 이용은 단순 구매 행위뿐만 아니라 ‘-리단길’ 등 독특한 공간특성을 가진 상권에 ‘로코노미(Loconomy, Local+Economy)’ 공간소비문화 양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12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을 발표하며 지역가치를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특화재생), 문화체육관광부(문화도시사업)등 다양한 부처에서도 상권을 포함한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상권정책은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공간적 지원사항으로는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간판 정비 및 상징조형물 중심의 기본적인 인프라시설 및 공간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사업구역 단위로 지원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된 지역활성화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법정 구역의 지정요건은 지역의 공간적 특성에 상관없이 상인 등의 조직구성 조건을 바탕으로 상업지역, 면적, 점포수를 임의로 설정하여 상권의 실제 공간 범위와는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활동에 미치는 공간특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한 지역상권 공간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간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상권 기반의 지역활성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정인아

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65세 이상 장애인구도 점차 증가하여 2020년도에는 49.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통하여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을 높이기 위하여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인증 제도를 시행하였다. 인증 제도 도입 이후 2015년 국가 및 지자체 발주 공공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이루어졌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등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16년 이후 건축물의 인증 교부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 고안되어 유지되고 있는 인증체계와 절차가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내용에 적합한 방식인지, 6개 분야 94개 지표를 인증기관의 담당자와 심사위원이 검토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평가 방식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인증 관련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인증 취득에 과도한 기간이 소요되어 초기 설정된 설계용역기간 내에 인증을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거나 인증 운영기관 간에 공통된 운영 기준의 부재, 인증 범위를 벗어난 심의의견 제시 등 운영 방식과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 행태, 대상지 특성, 건축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 유관 법령별로 동일한 시설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 또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초기 도입 취지를 검토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증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건축 생산과정에서 규제처럼 작동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 개선을 통하여 건축 산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배선훈

* 보건복지부. (2021).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4월 20일 보도자료.

⑪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도시설계 제도 개선 연구

2019년 7월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택지 입체적 마스터플랜 적용 정책 도입 후, 같은 해 3개 지구(과천과천, 수원당수2, 안산신길2)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주요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도시건축통합계획 마스터플랜, 입체적 마스터플랜, 도시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등의 이름으로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이란 법정계획인 지구계획 수립에 앞서 지구지정 후 입체적 마스터플랜 공모를 시행하고 당선된 팀이 지구계획 수립팀과 협업하여 당선안의 계획 개념을 기반으로 법정계획인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설계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건축통합계획의 도입으로 일부에서는 마스터플랜 당선자가 총괄건축가의 역할을 하는 등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이르는 과정이 엔지니어링 기반의 계획으로 진행되는 기존의 방식과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 등에 따르면 마스터플랜 당선팀과 지구계획 수립팀 간의 협업체계 구축의 어려움,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 지구단위계획의 평면적 작성지침의 한계 등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이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3기 신도시 및 시범지구에서 기 추진된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실현 과정을 추적하여 절차, 주제, 내용 측면에서 성과와 한계를 밝히고 도시건축통합계획의 정착을 위한 도시설계 제도 및 운영 과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기 신도시 이후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 시 계속해서 도시건축통합계획이란 이름으로 과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의 모니터링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적용 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혜원

12 현대 정원도시의 다원적 기능 구현을 위한
계획방향 연구

20세기 초 영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던 정원도시 개념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부상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정원도시를 도시 발전 전략으로 선언하였고, 중앙행정기관 역시 정원도시의 지정과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원도시는 정원에 내재된 가치를 도시 차원에서 구현함으로써 도시가 직면한 문제와 도전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정원都市는 단순히 정원 면적을 늘리고,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이라는 자연·문화적 자원을 기반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세계적 차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도시적 차원), 바이오필릭과 불안사회(개인적 차원)와 같은 사회·경제·환경 문제에 대한 도시의 대응 전략인 것이다. 정원도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원도시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목표(KPI)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간(spatial)·활동(behavioral)·제도(institutional) 차원의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이 연구는 현대 정원도시의 다원적 가치 구현하기 위한 정원도시 계획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정원도시의 개념과 다원적 가치를 설정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오늘날 정원도시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종합하고, 전문가 설문 조사·분석을 통해 기본적 가치와 선택적 가치를 구분한다. 둘째, 현대 정원도시의 다원적 가치를 기준으로 국내 정원도시 계획과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셋째, 일반시민들이 정원도시에 기대하는 가치와 계획 방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넷째, 정원도시 브랜드 구축에 성공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정원도시 계획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섯째, 정원도시 구현을 위한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정원도시를 위한 관련 제도와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연구를 통해 정원도시가 국민 삶의 질 향상, 도시 경쟁력 강화, 탄소중립사회 실현 등에 기여하는 도시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

김용국

13 유산영향평가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공간관리 정책방안 연구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채택 이후 현재까지 등재된 세계유산은 약 1,200개에 이른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책 또한 등재 중심에서 점차 소재국의 관리체계를 통한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2018년 이후 의무화 도입이 시작된 유산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 HIA)의 실시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 2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세계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을 포함한 ‘세계유산지구’를 유산영향평가의 시행범위로 규정하였다. 또한 2023년 10월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유산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세계유산지구 내 개발사업 시 유산영향평가 실시 의무 및 관리·감독 미이행 시 벌칙 규정 등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등재된 국내 세계문화유산 14개소의 경우 유네스코 등재 시 제출된 세계유산지구와 국내 문화재 관리구역이 일치하지 않고, 유산영향평가가 일종의 규제로 인식되는 어려움으로 2021년 법령 제정 이후 세계유산지구를 고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제적 기준에 따른 유산영향평가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완충구역 바깥이라 하더라도 특정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 연구는 국내 유산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의 효율적 공간관리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내 문화재구역을 비롯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경관법」 등 타법과의 연계를 통한 포괄적 공간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유산영향평가 수행 방안으로서 다양한 경관관리 방법론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국내 세계유산지구의 효율적 공간관리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손은신

14 탄소중립사회 달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정보체계 개발방향 연구

탄소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미 다가온 위기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3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었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을 통해 현실적 탄소배출량 감축수단을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탄소중립사회 달성을 위한 도시 및 인프라 차원의 옵션 중 그린인프라를 가장 실현가능성 높고, 신뢰도가 높으며, 효율적인 옵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그린인프라가 도시 및 인프라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도가 높음에도 탄소중립 계획에 그린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관련 데이터 구축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외 연구들은 개체목 단위의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데이터 구축은 공원 및 녹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체목 단위 데이터는 전국 단위 데이터가 부재하거나 지속적인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의 ‘RE100 플랫폼’과 같이 지자체별 예산을 소비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데이터가 미비한 상태로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체계적 그린인프라 데이터를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 정책 활용 및 현황평가를 위한 그린인프라 정보체계 구축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구축되고 있는 그린인프라 정보 목록과 속성정보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구축되어야 하는 그린인프라 정보 목록을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그린인프라 정보체계 추진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체계적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데이터 수집 현황, 관련 기술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 데이터 구축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지자체 단위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위한 그린인프라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그린인프라를 활용한 탄소중립 달성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허한결

포럼 및 세미나

auri 소식
—
Vol. 53
Spring 2024

상징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 국제세미나 개최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공간연구원은 2월 1일(목)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상징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장소이자 역사·문화·시민 소통공간을 의미하는 '상징공간'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나라의 상징공간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국가상징공간의 핵심가치 발굴과 조성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김성도 고려대학교 교수가 '상징공간의 인간학 서설'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Massimo Leone(마시모 레오네) 이탈리아 토리노대학교 교수가 '아고라에서 포럼을 거쳐 피아자 piazza까지 : 상징적 장소로서의 로마의 광장들'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Pascal Lardellier(파스칼 라르들리에) 프랑스 부르고뉴대학교 교수가 '기호적 도시로부터 의례적 도시로 : 세례모니적 도시성을 위한 이론적 이정표'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배제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아 김성도 교수, Massimo Leone 교수, Pascal Lardellier 교수,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4 제2차 AURI 건축도시포럼 '대한민국 메가시티의 미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건축가협회는 2월 5일(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4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메가시티의 미래'라는 주제로, 건축·도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인구감소 시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이 '메가시티 한국'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최봉문 목원대학교 교수가 '메가시티 이해와 제언-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성훈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장, 임진우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이경석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장, 전영훈 대전광역시 총괄건축가, 김재혁 한마음재단 전문위원,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공간문화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건축·도시 분야의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2024 제3차 AURI 아카데미 '한일국제세미나'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3월 15일(금)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4 제3차 AURI 아카데미 한일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도시의 형성 과정과 도시경관 관리체계'를 주제로, 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 및 일본 규슈대학과의 연구 교류 및 전문가 네트워크 협력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첫 번째 발제는 사카이 다케루 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 회장(규슈대학 교수)이 '일본의 도시경관 관리체계'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두 번째 발제는 윤두원 KPA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 실장이 '행복도시 형성과정과 세종 도시경관'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엄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하여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백기영 KPA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 단장(유원대 교수), 한승욱 박사(前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위원), 홍동기 규슈대학 조교가 참여하였으며, 도시경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이러한 국제교류를 통해 연구품질 제고 및 연구분야 발굴 등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2023
AURI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건축공간연구원은 3월 21일(목)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3 AURI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연구원의 2023년도 주요 연구 성과를 더욱 많은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구원은 국민 삶의 질, 공간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에 힘써왔으며, 보고회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나누고자 한다"라며 행사의 목적을 강조하였다.

보고회 1부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뽑은 우수 연구과제 4건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먼저 '건축규제 혁신 지원사업'의 정책기여실적과 향후 계획을 배선헤 부연구위원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김민지 연구원이 발표하였다. 이어 조상규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건축민원 대응 효율화 방안 연구'를 통해 건축법령 해석지원 시스템을 개발한 과정을 소개하였으며, 박성남 연구위원의 '맞춤형 공간전략 도출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진단 체계 연구'의 성과 발표가 진행되었다. 2부에는 김영현 건축정책본부장의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건축: 메가트렌드 시대 건축정책의 성과와 과제', 성은영 공간문화본부장의 '사람과 삶의 이야기가 있는 장소와 공간문화 연구', 조영진 지속가능공간본부장의 '공간환경의 안전을 넘어, 빅데이터 활용 Active Living을 향해'까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와 그 성과를 소개하였다.

이후에는 이영범 원장(좌장), 김소라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전영훈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재현 대한경제 기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원 단신

건축공간연구원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MOU 체결

auri 소식
—
Vol. 53
Spring 2024

건축공간연구원과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월 28일(수) 세종 박연문화관에서 '2024 청년 꿈 키움 사관학교'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세종시 구직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원의 전문가(현직자)를 멘토로 연계 지원하는 것으로, 양 기관은 개인 맞춤형 멘토링 진행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은 "건축·도시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건축공간연구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새로운 기회를 얻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건축공간연구원
2024년
수행 연구과제

기본과제	
탄소중립사회 달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정보체계 개발방향 연구 허한결	건축물 설계과정의 안전성 검토·평가제도 현황 진단 및 합리화 방안 연구 이화영
유산영향평가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공간관리 정책방안 연구 손은신	이재민 생활안전과 지역사회 회복력 제고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방안 연구 박유나
현대 정원도시의 다원적 기능 구현을 위한 계획방향 연구 김용국	건축물 안전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산업 진흥 방안 현대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모니터링을 통한 도시설계 제도 개선 연구 이혜원	노후계획도시의 탄소중립도시로 전환을 위한 건축물 생애주기별 탄소배출저감 방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활용 연구 김성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배선희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모델 개선방안 연구 임보영
공간특성을 고려한 지역상권의 공간관리 방안 연구 정인아	지역맞춤형 건축정책을 위한 건축물 연령 지표 개발 송유미
임대형기숙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기준 개선 연구 유제연	
인구감소도시의 콤팩트-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생활권계획 활용방안 변은주	

수시과제

건축서비스산업 역량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오민정	공공시설 운영현황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향 김준래
한옥 등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실태 분석 방보람	소록도 문화유산 지정 방안 연구 박일향

수탁과제

국가 탄소중립 도시 지정 대응전략 및 지역별 조성방안 마련 연구용역 이은석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조사 연구 오성훈	스마트+빌딩 핵심기술 개발 기획 남성우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 김은희	2023년 공공건축물 리뉴얼 지원 및 관리 남성우	2024년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 수행 용역 임보영
보행안전지수 시범운영 및 활용기반 구축 용역 남궁지희	공원전용 보행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오성훈	5차년도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신치후
국가상징공간 조성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 오성훈	공공건축물 관리 및 운영 기술개발 기획 김상호	다중 분산발전 기반의 옥상온실형 스마트 그린빌딩 융복합 시스템 개발 및 실증(4차년도) 이은석
2023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등 한옥홍보 기획 및 운영관리 신치후	지역 스마트도시계획 웹포데스크 운영 지원 김영현	초고령사회 보행환경 평가 및 개선시스템 개발(건축공간연구원)(3차년도) 오성훈
스마트플러스빌딩 로드맵 수립 및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조상규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 강현미	24년도 어촌활력증진 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서수정
2023년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운영관리 위탁용역 이여경	부여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수립 심경미	
	함안 말이산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 연구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보고서 안내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보고서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발간물 구입에 관해서는 자료실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실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2023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2023-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2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작물 관리체계
마련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3
재난 대응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관리체계 개선방안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4
제조 조립을 위한 설계(DfMA)기반
건축 활성화 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5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집수리 정책 개선 방안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6
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및
주변지역의 보전·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7
중·소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간주도·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8
근현대 건축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수리체계 개선 방안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9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10
맞출형 공간전략 도출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진단단계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11
가설건축물 화재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12
디지털 옥외광고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1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14
전기차 확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충전설비 설치기준 개선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15
영구임대주택의 지역사회 고밀 및 갈등
완화를 위한 공간환경 개선 전략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16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 수립 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17
공유유산 개념을 적용한 국외사적지
활용·관리 정책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18
위드 코로나 시기 생활권 공공시설의
대응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3-19
데이터 기반 정책을 위한 건축물
생산량 지수 개발 연구
25,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3-1
물류창고 화재안전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방안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3-2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3-3
국가기본도 구축 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3-4
생활인프라 복합화시설의 운영실태
진단: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3-5
지방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복수
주거거점의 현황과 이슈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3-6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건축민원 대응 효율화 방안 연구
1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1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건물 부문
ESG 연계방안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2
이용자를 고려한 공공건축 조성방안
연구: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3
보행환경개선사업의 도시정책
연계방안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4
결합건축 제도의 적용 가능성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5
고령자 돌봄서비스 수요자를 고려한
주거지원 방향과 과제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6
외국인 밀집지역의 근린환경 실태 분석: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관점에서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7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고도화 및
통계 활용방안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8
공간기반 혁신기술 융복합 건축물
계획 기준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9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주거생활공간의 진단 과제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10
빅데이터 기반 건축물 화재 및 홍수
리스크 분석 모델 개발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11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3-12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회혁신실험의 실행방안
10,000원

2022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2022-1
신산업 관련 건축 법제 개선방안:
데이터센터와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2
농촌 마을 공간관리를 위한 토지이용의
통합적 관리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3
설계공모 이후 건축 생산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공공건축 제도 개선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4
개인형 공유모빌리티 이용활성화를
위한 건축·도시공간 대응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5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한
생활권 단위 공간계획 모형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6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7
폭염대응을 위한
도시 가로녹지계획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8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9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건축기준 정비 방안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0
아동친화 주거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모델 및 지원방안 연구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1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형 놀이자원망 구축 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2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3
건축물 공간정보 빅데이터
시범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4
건축행정 통제 개선 및
공간정보 융합 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5
차매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6
동네생활권 개념 도입 및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2-17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의
효과 분석방법 연구
25,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1
현충시설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2
다양한 거주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주택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3
거주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문화 정책과제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4
관광안내소의 효과적 설치·운영을 위한
입지 및 공간 기준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5
공간수요 다양화에 대응한
가설건축물 관리방안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6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제도
정비 방안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7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8
스마트건축 인증 도입 및 운영 방향 연구
1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1
보도의 계획 및 설계기준 개선방안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2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분석 기준 및
체계 마련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3
스마트도시계획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4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5
빅데이터 기반 건축물 화재 예측
모델 개발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6
가상환경을 활용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요소 도출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7
지역사회 고령친화 생활마을 조성
모델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8
지역자원 활용 기반의
도시재생회사 사업모델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9
건축자산 진흥구역 활성화 방안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10
이용자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 연구:
행정복지센터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11
지자체 경관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2-12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사업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10,000원

2021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2021-1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공간자원 활용체계 구축방안: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2
스마트건축 산업화 모델 및
제도 기반 확충에 관한 연구
3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3
건축규제 특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의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
2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4
쇠퇴지역 공간관리를 위한
빈집 정책 개선방안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권 공원녹지 개선 방안
3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6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업무
현황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1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7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계획 및 사업 개편방안 연구
2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8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9
포스트코로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인택트 어버니즘 전략 연구
2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0
인구감소시대 노후공동주택 빈집의
실태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
2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1
시민주도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2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31,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3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3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4
로컬리움 기반의 중소도시 재생정책 방안
28,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21-15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28,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1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15,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2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설계
도입 및 제도화 연구
14,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3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위한
협의조정제도 개발 및 평가 연구
15,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4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위한
건축기획 개선방안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5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연구
11,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21-6
농촌마을의 공동화 현황 및
공간관리 수요 분석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1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현황과 과제 -
특·광역시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과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2
스마트도시 기술 및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방향 연구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3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기후 탄력적 발전 경로(CRDPs) 연구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4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5
범죄주려움 저감을 위한
도로조형 조도 기준 연구
14,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6
근린재생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 운영방안
2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7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8
보행자길 조성·관리를 위한
보행행태 및 인식 분석:
보도를 중심으로
2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9
이용자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 연구:
국민체육센터
2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21-10
민간시장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개선 방안 연구
15,000원

건축공간연구원 신간 안내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소개 및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비매품이 아닌 발간물은 서점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출판·홍보팀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건축자산 정보체계
활용 안내서
이규철, 손은신
비매품



광양읍 한옥,
지역 문화거점을 향하여
국가한옥센터
비매품



202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연차보고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이여경, 이화영, 홍예은
비매품



건축서비스산업
동향과 이슈 2023
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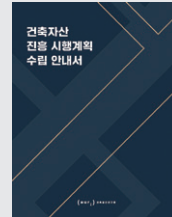
건축법제동향 2023
건축규제혁신센터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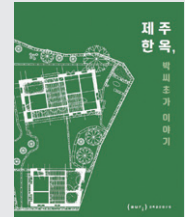
보행자우선도로 매뉴얼 2022
오성훈, 남궁지희,
김영지, 변혜영
비매품



한눈에 보는 건축민원
빅데이터 2021
이여경, 이주경,
김민지, 홍예은
비매품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안내서
이규철, 박채린
비매품



제주 한옥,
박씨초가 이야기
국가한옥센터, 양건, 김태일,
고기봉, 이창규, 강정윤
비매품



세계건축법제동향 2022
이여경, 김준래, 오세원
비매품



어촌지역의 범지구상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손동필, 임보영, 허재석
비매품



건축서비스산업 동향과
이슈 2022
김상호, 김은희, 조시은, 오민정
비매품



2021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
비매품



공공건축 제안공모
운영가이드 202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